

2022년 옹진군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옹진군에서 2019. 4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2022.4.18.~4.29까지 10일간 3개반 21명이 참여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80건(본처분 64건, 현지처분 16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등 처분요구를 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발췌한 수범사례 9건은 대내·외에 공개하여 산하 전 기관의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사결과

구분	처분현황(건)			처 분 요 구						
	계	본 처분	현지 처분	처분종류(건)				재정상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추징 환수 반납	추급 환급 감액
계	98	82	16	98	44	44	10	21/ 309,608	17/ 267,498	4/ 42,110

2022년 옹진군 종합감사 결과

[지 적 사 항]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명령 유예농지의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농지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농지이용실태 파악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및 제62조(양벌규정)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40호)에 따라 농지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처분대상농지 결정 및 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의 경우 처분의무기간(1년) 내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 유예되며, 처분의무기간 안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성실경작을 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는 처분명령일로부터 6월 이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군수는 처분명령을 유예한 농지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 매도위탁농지의 매도여부 등을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처분명령을 유예한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대상농지를 자기의 농

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 해당 농지의 처분의무는 소멸된다.

웅진군에서는 2016~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되어 농지처분 명령유예된 **필지에 대한 사후 관리에 있어, 처분유예기간이 20**. *. **.~20**. *. **.인 *필지의 경우 20**년부터 20**년까지 해당농지에 대한 경작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2021년에는 실태 조사를 통해 처분의무소멸 0건과 처분명령 0건이 조치되었다. 또한 처분유예기간 이 20**. *. **. ~ 20**. *. **.인 6필지의 경우에는 2020년에 실태조사가 되지 않았으며, 2021년 경작확인을 통해 0건의 처분명령이 이뤄졌다.

이와 같이 웅진군에서는 처분명령 유예농지에 대하여 매년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농업경영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처분명령을 실시하는 등 조치가 이뤄져야 했으나, 2019년 0필지, 2020년 00필지에 대하여 농지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분명령 유예농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웅진군수는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명령 유예농지에 대하여 매년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농업경영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광역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의 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친환경식품분야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근교 농업 육성사업 지침’을 2020~2021년 군·구에 시행하였으나, 옹진군에서는 시의 지침 중 주요사항을 미반영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첫째, 사업대상자는 설계도, 견적서, 시방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옹진군에서는 2020년 00농가, 2021년 00농가를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및 과수비가림 시설에 대한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교부신청 시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통장사본을 첨부받아 보조금교부결정 하였고, 착수계, 감독공무원 지정, 완료계 절차를 거쳐 현장 출장복명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치대상 시설의 설계도, 견적서, 시방서에

대한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둘째,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시 농가의 사업실적과 증빙자료(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설치비 입금내역 등)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웅진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지급신청서, 입금계좌지정신청서, 완료확인서와 완공사진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완료계 또는 보조금 지급 전 비닐하우스 및 비가림시설의 경우 「원예·특작 시설 내재형 규격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에 따른 설치 증빙자료 및 농가 설치비 입금내역서와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사업실적 증빙자료의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셋째,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사후관리기간 내 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웅진군에서는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사후관리에 있어 대상농가에 대한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설치한 농가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영농에 이용하는지 연 2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2021년 동안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웅진군수는

[주의]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추진 시 시 사업지침을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부가가치세 환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으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32421호) 제7조 [별표 5] 에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22호) 제6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옹진군에서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추진 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톱밥’ 품목에 대하여 보조사업 대상농가에게 보조금 교부 시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공제하여 교부하여야 하였으며, 보조사업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옹진군은 2019 ~ 2020년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

서 0개 농가에 대하여 톱밥 구입 보조금 00원과 00원을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00원을 포함시켜 정산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행정지도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보조금 중 00원이 감액되지 않고 부적정하게 교부되었으며, 지원농가 또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시정]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 00원을 환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추진 시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축산물판매업 위생교육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21조제1항(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195호) 제12조(교육결과 보고 등)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허가(신고)관청에 보고하고 당해 연도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허가(신고)관청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과태료)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축산물판매업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위생교육 계획 등 일정 고지 부적절

웅진군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및 일정을 안내함에 있어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현황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7개 면사무소로만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면사무소에서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음에 따라 면사무소 소재지 내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개별 위생교육 계획 및 일정을 통보하지 않음에 따라 축산물 위생교육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소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105호) 제12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신고관청은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웅진군에서는 20**~20**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신규 신고 및 행정처분 영업자에 대한 집합교육 이수기간 유예와는 별도로 20**~20**년도 보수교육 대상자의 온라인 위생교육(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표]의 당해연도 위생교육 미수료자 확인 및 교육 이수를 위한 추가 공문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웅진군수는

[주의] 축산물판매업 위생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계획 안내 및 교육 수료 여부 확인 후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비용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 시행 지침 II.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에서 사무장 채용 비용 지원은 마을사무장 1인당 2020년은 1,795천원, 2021년은 1,822천원, 2022년은 1,914천원 이내이며 보조율은 국비 50%, 지방비 50%이다. 별도 제경비(4대보험료와 퇴직급여 충당금)는 지자체 또는 지원 대상마을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지침 III. 4. 사업시행단계에서 협약체결과 관련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는 협의를 거쳐 가협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약 승인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대상마을로부터 가협약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협약서에 날인하고 협약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협약 승인 조치한다.

- 협약기간은 매년 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에는 근무시간, 휴무일, 후생복지, 편의 제공, 4대 보험, 퇴직급여 등 복무 및 활동 등에 관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또한, 같은 지침 III.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지급시 해당 마을의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1주 이내 증빙서류 및 현장 확인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등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웅진군에서는 2020년~2022년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 추진하면서 ○○ ◇◇◇◇휴양마을의 경우 웅진군(갑), 채용대상자(을), 지원대상마을(병) 3자간 2020. 8. 24. 체결한 협약서 제2조 제2항에는 [“병”은 “을”을 채용함에 있어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식사, 후생복지(보험 등) 등 편의를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을”에게 월 00천원의 채용비용(국고,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을 매월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3항에는 [“병”은 “을”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복지를 위해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충당금을 마을 부담으로 적립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20**. *. **. 체결한 협약서에는 월 00천원(국고,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을, 20**. *. **. 체결한 협약서에는 월 00천원(국고,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의 채용비용을 매월 지급하고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충당금을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웅진군에서는 ○○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협약서에서 정한 대로 채용비용이 지급되지 않고 4대보험료와 퇴직급여 충당금을 사무장 채용비용(보조금)에서 일정액을 부담하게 하여 20**년 00원, 20**년 00원의 보조금이 채용대상자에게 과소 지급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대해 웅진군에서는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4대 보험료를 마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조치했어야 하나, 2020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기에 관련 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사무장에게 과소 지급된 채용비용 정산 관리 및 감독에 소홀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숙지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 [시정] ①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 시행 지침 및 협약서에 따라
○○ ◇◇◇◇휴양마을에서 사무장에게 지급되지 않은 채용비용(보조금) 20**년
분 00원, 20**년분 00원을 지급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 사무장 채용비용 지급 시 증빙서류 및 현장 확인 후 계약불이행 등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 연찬 및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해양수산부 2021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어선 기관·장비·설비 대체) 사업 시행지침 III. 3. 사업자선정 단계에 따라 시·도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은 후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자 명단, 지원 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및 지역별 수협(수협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옹진군에서는 2021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20**. *. **. A, B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해양수산부 승인 없이 20**. *. *. 사업착수를 하고 20**. *. **. 사업승인대상자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여 20**. *. **.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대해 옹진군에서는 향후 해당사업 진행 시 시행지침을 철저히 확인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 [주의] ①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어선 기관·장비·설비 대체) 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대상자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어업면허(양식어업) 유효기간 만료 대상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 등)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4월부터 3월까지의 사이에 어업권자에게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동 규칙 제2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신청서를 그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옹진군에서는 00건에 대하여 어업권자에게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4월부터 3월까지의 사이에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받도록 개별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어업면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대해 옹진군에서는 향후 업무 연찬 등을 통해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업면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주의] ① 어업면허(양식어업)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 허가를 받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시행 지침 III. 6.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단계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 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업완료 후 익년 3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대상자는 에너지절감시설 운영현황 효과에 대한 자료를 사업 완료 후 익년 2월까지 시·군·구 제출하고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어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와 확대 보급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옹진군은 2019년~2020년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자에게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도록 하지 않았고, 사업진행상황과 경영 성과 분석평가 결과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장평가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사업대상자로부터 에너지절감시설 운영현황 효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고, 사업대상자가 규정된 표찰을 미 설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대해 웅진군은 향후 동 사업 시행 시 시행지침을 철저히 숙지하여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힘쓰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웅진군수는

- [주의] ①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완료 후 현장 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지방어항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어촌·어항법」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지방어항 개발사업 시행 허가(협의) 조건 및 시행 절차 II. 협의조건, 4)항에 따라 공사는 허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기간 내 착공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7)항에 따라 공사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착수계, 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도급자 건설업 면허증 사본, 계약내역서, 예정공정표,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착수전 전경 사진 등]를 인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옹진군에서는 2021년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 지방어항 개발사업 시행 허가(협의) 조건 및 시행 절차에 따라 공사는 허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인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옹진군에서는 ○○○○ □□□ 개선사업 및 ○○○○ ▷▷▷ 신축공사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착공하지 않았으며, ○○○○ ▷▷▷ 신축공사 및 ◆◆◆ ●●●●●센터 신축공사의 착공신고서를 인천시에 제출하지 않는 등

지방어항 개발사업 시행 허가(협의) 조건 및 시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웅진군에서는 ◎◎실에서 추진중인 ○○○ ▷▷▷ 신축공사의 경우 3개월 내에 착공신고 연장 신청을 못한 사실이 있으며, 20**. *. *. 공사 업체와의 계약 후 20**. *. **.일 협의조건 변경사항(시설규모의 10%이상)이 있어 웅진군 해양시설과에 어항개발사업의 시행(변경) 협의를 한 사실이 있으나 해양시설과에서는 인천시와 협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협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업무 연찬을 통해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웅진군수는

[시정] 지방어항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 시 인천광역시의 지방어항 개발사업 시행 허가(협의) 조건 및 시행 절차에 따라 착공기한 준수 및 착공신고서 제출 등 관련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옹진군(○○과)은 경찰서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법령 위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 안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의 고용·알선 및 호객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법 제27조(등록취소 등)에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이 동일한 경우)로 적발된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한다.

따라서, 용진군에서 경찰서 등으로부터 법령 위반 노래연습장업자를 통보 받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적발일로부터 1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라 가중 처분을 하여야 한다.

2019. 4월부터 2022.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용진군의 노래연습장업자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용진군은 법령 위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 및 위반사항 착오로 부적정하게 처분하여 용진군 행정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 주류 판매·제공으로 적발된 □□노래연습장의 경우 적발된 날 이전 최근 1년('19.**.**~'20.**.**) 기간 중인 20**.**.**, 동일한 위반행위인 주류 판매·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반사항별 개별기준에 따라 주류 판매·제공 2차 기준인 영업정지 30일을 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진군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주류 판매·제공 2차로 판단하였음에도 위반사항별 개별기준을 착오하여 영업정지 20일을 처분하였다.

또한, 20**.**. 주류보관으로 적발(위반일 20**.**.**)되어 ◇◇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대상으로 통보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주류 보관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10일을 처분하여야 하나, 용진군은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주류 판매·제공 2차 위반으로 착오 판단¹⁾하여 20일의 영업정지를 처분한 사실이 있다.

특히, 용진군의 경우 감사대상기간 중 법령 위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건이 총 0개 업소 0건으로 많지 않음에도 그 중 2건을 담당자의 착오로

1) ▷▷노래연습장은 2020.*. 주류판매·제공 1차 위반으로 5일의 영업정지를 처분받은 사실이 있음.

부적정하게 처분하여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따르면 주류 판매·제공 2차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30일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용진군은 감사대상기간 중 주류 판매·제공 2차 위반으로 판단하여 처분한 2건 전부 영업정지 20일을 처분하는 등 법 시행규칙의 위반행위별 개별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주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행정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법령 위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미등록 야영장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옹진군(○○과)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 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및 제4조(등록)에 따르면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3조(벌칙)제2항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옹진군은 관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등록 영업이 확인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번 감사기간 중 야영장 등록 여부가 의심되는 □□ 해수욕장 야영장 등 0개 업체에 대해 등록 여부를 점검한 결과,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옹진군은 20**. *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미등록 야영장 중 재검토가 필요한 야영장에 대해 등록 여부(유사 명칭 등록여부 포함)를 확인하여 회신하라는 공문을 받고 □□ 해수욕장 야영장

등 0개 업체를 미등록 야영장임을 확인하여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용진군은 위 야영장이 미등록 야영장임을 확인한 이후 2022. 4월 감사일까지 위 야영장에 대한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사실조차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감사일 현재까지 □□ 해수욕장 야영장 등 0개 업체에 대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고발 등 적절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위 업체 중 □□ 해수욕장 야영장의 경우, 20**.*월 불법운영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확인을 통해 미등록 영업행위를 확인하였음에도, 민원 내용 중 국유지(임야) 무단점유에 대한 내용을 관련 부서인 용진군 ◆◆과에 전달한 채 야영장 미등록 영업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일 현재까지 단 1차례의 점검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용진군(●●실)은 20**년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해변 물놀이 시설 설치 등) 추진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기획재정부)로부터 ㉠㉠ △△△△△ 야영장이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였고, 20**.*월 부지 매입 계획 수립시부터 해당 부지에 불법시설물이 존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이 불법시설물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용진군 ○○과는 ●●실에서 불법시설물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유로 감사일 현재까지도 위 야영장에 대한 점검은 물론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점검 및 조치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미등록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미등록 야영장들로 인한 이용객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야영장 관리 기관은 미등록 야영장을 확인하는 경우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고발과 더불어 관련 부서(기관)와 협조를 통해 농지·산지 등의 불법전용, 건축·전기·소방·가스 및 상하수도 인허가 미흡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시행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시정]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옹진군(○○과)은 옹진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문화 창달, 체육활동을 통한 국민건강의 질적 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감사일 현재 [표1]과 같이 총 48개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표1】 체육시설 운영현황

구 분	계	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계	48	5	7	11	7	6	7	5
종합운동장	7	1	1	1	1	1	1	1
실내체육관	4	1	1	1				1
테니스장	10	1	2	2	2	1	1	1
게이트볼장	15	1	1	3	1	4	3	2
풋살장	5			3	2			
배트민턴장	1		1					
골프연습장	2		1	1				
다목적구장	3	1			1		1	
족구장	1						1	

※ 자료출처 : 수감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2019년 종합감사 처분(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 정비) 이행 소홀

옹진군은 2019년 옹진군 종합감사에서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 제1항 및 제3항의 상충으로 면장에게 위임된 옹진군민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이 면별, 체육시설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어 규정 보완

을 권고받은 바 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용진군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용진군은 2019년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2021. 12월까지도 용진군민 체육시설 사용료를 체육시설별로 달리 부과·징수하고 있었다.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 제19조(감사결과의 통보)제2항에 따르면 감사결과 개선요구·권고·통보 등 처분을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2개월 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후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용진군은 2019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안에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인천시 감사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례개정 등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진군은 2019. 6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체육시설 건립 등 현안업무 처리,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1년 3개월이 경과한 2020. 9월에서야 7개면에 체육시설 사용허가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관련규정 첨부)을 시달하였으나 이때까지도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 보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용진군은 2021.*.**.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2. *. * 조례를 공포·시행하는 등 감사 지적사항 이행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2. 체육시설 안전점검 소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²⁾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이하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및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안전점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안전점검 결과를 안전점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공개³⁾하여야 한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은 시설물 분야, 소방시설 분야,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분야에 대해 실시하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의해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 안전점검기관은 체육시설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중 2019.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웅진군의 공공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웅진군에서는 관내 44개의 공공 체육시설⁴⁾에 대해 2020.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차례만 점검을 실시하여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위임되어 있음.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른 공개사항

①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②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③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④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조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

4) ◇◇면 국민체육센터, ▷▷면 국민체육센터, △△면 실내게이트볼장, ●●면 실내게이트볼장 4개소는 2021년 하반기 준공시설로 감사대상기간 중 안전점검 대상 체육시설이 아님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 [주의]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② 2019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및 권고

제 목 해수욕장(야영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옹진군(○○과)은 「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옹진군내 해수욕장 중 ㉠㉠㉠ 및 ㉡㉡㉡에 야영장을 설치하고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1. 해수욕장(야영장) 사용료 정산 소홀

「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및 제25조(준용)에 따르면 군수가 해수욕장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되,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예산지원 등) 및 제12조(사용료징수 등)에 따르면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옹진군이 수탁자인 ㉠㉠㉠ 법인 및 ㉡㉡㉡ 법인과 체결한 「해수욕장

위탁운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제5조(운영부담)에 따르면 수탁자는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⁵⁾ 및 그에 따른 인부임을 포함한 모든 부담을 인수하며,

수탁기관이 징수한 사용료는 계약서 제8조(사용료징수 및 납부)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종료 후 정산하되, 사용료 징수의 배분은 웅진군과 수탁자가 순이익⁶⁾의 00:00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웅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및 계약서 제10조(관리·감독)에 따르면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웅진군은 해수욕장(야영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위탁한 해수욕장(야영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되, 수탁기관에서 징수한 사용료를 정산하는 때에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중 웅진군에서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 및 ㉡㉡㉡ 해수욕장(야영장)의 2019년~2021년 사용료 정산내역 확인 결과, 웅진군은 수탁기관이 위탁 해수욕장(야영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법인 운영경비를 사용료에서 지출하거나,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운영비 지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시정 등 조치없이 사용료를 정산하여 해수욕장(야영장) 사용료 정산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5) ① 위탁시설물 및 해수욕장 관리·환경 정비 ② 부대 주차장 관리 및 주차 질서 확립 ③ 샤워장 및 대여 부기류 관리와 대여 행위 ④ 해수욕장 내 LED전광판 관리 ⑤ 기타 위탁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수탁자가 웅진군에 제출한 정산서에 따르면 순이익은 위탁기간동안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의 총액에서 수탁자가 위탁 해수욕장(야영장) 관리·운영을 위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임.

특히, ○○○○ 해수욕장(야영장) 수탁기관인 ○○○○ 법인에서는 2019년~2021년 위탁사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인 법인 운영경비 00원을 사용료에서 부당하게 지출하였고, 계약에 따라 지출이 가능한 해수욕장 운영 경비인 관리소 운영비에 있어서도 2019.**.**. ○○○○청장년회 찬조금 00원을 포함, 5개의 마을에 00원의 찬조금을 사용료에서 지출하는 등 총 00건 00원을 식대, 찬조금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만, ○○○○ 해수욕장의 경우 수탁자인 ○○○○ 법인에서 사용료 정산서 제출 시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없이 통장거래내역만을 제출하여 해수욕장(야영장) 관리·운영비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이 용진군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와 관련이 없는 법인 운영경비를 사용료에서 부당하게 지출하고, 해수욕장 운영비 역시 식대, 찬조금 등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지출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징수한 사용료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시정·보완 등 조치 없이 사용료 정산을 완료하여 사용료 정산 및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2020년, 2021년 해수욕장(야영장) 사용료 정산 결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군 세입을 전혀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민간위탁사무 관리·감독 소홀

「용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세부지침)에 따르면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수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웅진군은 해수욕장(야영장)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함에 있어 감사일 현재까지 세부지침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위탁기간 동안 위탁사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해수욕장 위탁관리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3. 야영장 예약제도의 공정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

웅진군은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관내 해수욕장에 [표]와 같이 야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0개의 야영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표】 해수욕장 야영장 운영 현황

시설명	시설현황	예약방법	사용료	비고
A	캠핑사이트(47개소), 화장실, 취사시설	전화	10,000원	위탁
B	야영장(32)	인터넷 (B.kr)	40,000원	위탁
C	야영장(35), 피크닉(35)	인터넷 (C.kr)	30,000원~50,000원	위탁

※ 자료출처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번 감사기간 중 웅진군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 시설별 예약 방법 등을 확인한 결과, 예약관련 정보⁷⁾가 수탁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분산되어 있었고 군청 홈페이지 등에 통합적으로 게시·관리되지 않고 있어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시설에 대한 예약 관련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웅진군에서 운영하는 위 야영장 중 A의 경우 별도의 예약시스템 없이 전화 예약만을 허용하고 있어 관리기관(수탁기관)이 자의적으로 사용자를 선정할 소지가 있고, 통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이용객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이용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며, 사용료 징수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7) 예약관련 정보 : 예약방법, 예약신청기간, 사용료 등

따라서 옹진군은 야영장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야영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수탁기관 예약시스템 연계기능 포함) 등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시정] ① 원활한 해수욕장(야영장) 운영을 위해 운영비 부담 범위 등이 포함된 위탁사무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수탁기관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② 징수한 사용료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료 정산업무 등 사후관리 방안 등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야영장 예약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징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리 관광지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면

내 용

인천광역시 옹진군(○○과)은 ◆◆리 관광지를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고급관광지로 격상시키기 위해 2008. 9월 ◆◆리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오토캠핑장을 설치하고 상가시설을 정비하였다.

1. 오토캠핑장 무단점유 방치

옹진군은 ◆◆리 관광지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설치된 ◆◆리 관광지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20**. *.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으로 등록한 후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0조(위탁관리)에 따라 ◆◆리 ○●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다가, 2019. *. ** 위탁계약 만료 이후 2022.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캠핑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 의무)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공유재산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및 제99조(벌칙)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4항 및 제20조(사용허가)제5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⁸⁾로서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제8항에 따르면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는 관광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시정명령,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웅진군은 행정재산인 캠핑장의 관리위탁이 종료되는 경우 수탁자로부터 위탁재산인 캠핑장을 원상태로 하여 반환받아야 하고,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캠핑장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 동안 「관광진흥법」에 따라 휴업을 등록하는 등 캠핑장이 무단으로 점유·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캠핑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캠핑장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중 기 수탁기관인 ◆◆리 ○○회에서 캠핑장을 무단으로 점유·사용(이용)하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웅진군은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8)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19-0672)

- 공유재산법 제2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고(제1항), 이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로 본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음
- 이러한 공유재산법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관리위탁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을 준수해야 함.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용진군의 ◆◆리 관광지 시설물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용진군은 위탁계약 종료 후 *년 *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기 수탁기관인 ◆◆리 ○○회로부터 캠핑장 시설물을 반환받지 아니하였으며⁹⁾ 미운영 공지 및 시설물 폐쇄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캠핑장을 개방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캠핑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¹⁰⁾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용진군은 2019. *. ** 위탁계약 종료 후 감사일 현재까지 캠핑장에 대해 단 1차례의 점검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캠핑장 미운영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어떠한 운영 방안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코로나19를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였고, 사업비 579백만원을 들여 조성한 캠핑장 전체 시설물을 *년 *개월 이상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2019년 이후 캠핑장 유지 관리에만 432백만여 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용진군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법령 위반 야영장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을 하는 야영장 관리기관으로서 야영장 이용객의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엄격하게 법령을 준수하여 캠핑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함에도 캠핑장을 운영하지 아니한 *년 *개월 동안 휴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용진군의 행정재산 관리 소홀로 캠핑장이 무단으로 사용(이용)되었고, 용진군은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인지하여 못하여 공유재산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 「공유재산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리 ○○회는 감사기간 중 20**년 해수욕장 폐장으로 화장실, 샤워장 등이 폐쇄된 상태에서 캠핑장에 텐트를 치고 물을 사용하고 싶다는 일부

9) 감사기간 중인 2022.4.25. ◆◆리 관광지 시설물 관리 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관리실 및 전기 시설물(사이트별 전기단자함 포함) 시건장치를 여전히 ◆◆리 ○○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관리실 내부 확인을 위해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리 ○○회에서 관리하는 열쇠를 잃어버려 확인할 수 없었음.

10) 실외에 설치된 사이트별 전기단자함 일부가 시건장치가 풀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미운영기간 동안(20**.*월~20**.*월) 캠핑장 전기사용량이 월 평균 00kWh로 확인됨.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관리 차원에서 쓰레기봉투 등을 주고 최소한의 금액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웅진군 측에 제출하고,

웅진군은 2019. *. ** 위탁계약 종료 후 캠핑장 시설물 점검 및 반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한 사실을 인정하며 앞으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캠핑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상가 무단점유 방치, 변상금 미부과

웅진군은 ◆◆리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19년~2020년 상가 1동(5호)과 판매대 7동을 「웅진군 관광지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사용·수익허가)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였고, 2020. *. ** 사용허가 종료 후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허가)제5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공유재산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등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웅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1년에 한번 이상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웅진군은 행정재산인 상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인으로 하여금 사용한 재산을 원상태로 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1년에 한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인이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하는 등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중인 2022. 4. 25 ◆◆리 관광지 내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관광지 내 상가 중 일부(0호)가 웅진군의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되어 상업용(■)으로 사용(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웅진군은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웅진군은 2020. *월 상가 사용허가 만료 후 사용인으로부터 기존 상가 내 물건을 보관할 장소 마련이 어려워 임시적으로 물건을 보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일시적으로 보관을 허용한 사실은 있으나 상가 내 상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견과 함께 무단점유가 확인된 사항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공유재산 관리대장 미작성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웅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에 따르면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이와 관련된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되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웅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1년에 한번 이상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웅진군 >>과에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각 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공유재산 관리대장 불일치 여부, 무단 점·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웅진군 각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과 종류별로 공유재산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상을 정확히 작성(전산 입력·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불일치 및 누락 재산을 확인하여 정비하고, 무단 점·사용 여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웅진군 ○○과에서는 19**.*.**. 신축으로 취득한 ◆◆리 관광지 내 상가 건물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2*년 *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전산 입력·관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인지하지도 못

하고 있었고, 소관 공유재산인 캠핑장 및 상가가 무단으로 점유되어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변상금 부과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A 및 B는 ◆◆리 관광지 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주관하는 자로서 「공유재산법」에 따라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며 소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A 및 B는 2019. *. **, 2020. *. ** ◆◆리 관광지 내 행정 재산인 오토캠핑장 및 상가의 사용허가(관리위탁) 종료 후 사용자로부터 사용재산을 반환받지 아니하였고, 사용허가(관리위탁) 종료 후 근무기간 동안 위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단 1차례의 점검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행정재산 관리를 태만히 하였다.

캠핑장의 경우 운영하지 않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휴업등록을 신고하거나 시설물 폐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나 조치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2년 *개월 이상 캠핑장 전체 시설을 개방·방치하여 캠핑장이 무단으로 사용(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상가 역시 사용허가 만료 후 사용인이 계속하여 상가 내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상가가 무단으로 점유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상기 관련자들은 문답서를 통해 위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점에 대해 인정하며, 행정재산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관리가 어려웠던 점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사용을 원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영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섬이라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기간 상기 공유재산에 대한 1차례의 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위 부서에서 운영하는 다른 해수욕장 시설의 경우 사용료 징수 배분율을 조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없이 운영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2020. 2월 코로나19 발생지역 확대로 지역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분의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를 감경을 적극 검토·활용할 것을 각 지자체에 안내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대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어떠한 검토나 조치 없이 코로나19를 사유로 위 행정 재산을 방치한 상기 관련자들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위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상기 관련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징계]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A, B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리 관광지 캠핑장 및 상가가 본래 조성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자 C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임기제공무원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1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및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보임용 등 부적정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08조(임용시험의 공고방법 등)에 따라 임용의 법령상 근거, 임용예정기관 및 담당직무내용,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학력·경력·자격증 및 능력 등의 임용요건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임용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고내용 범위에서 직무를 부여하고 근무지를 지정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각 호1) 외의 전보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옹진군 ▷▷과(현 ○○과)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

-
- 11)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협 시 직렬별 직무내용과 근무예정부서를 [표1] 과 같이 공고하였다.

【표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렬별 공고현황

채용분야	직급	직무내용	근무예정부서
사회복지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국민기초, 장애인, 노인, 아동 및 청소년, 영유아 등) □ 저소득층 지원(긴급복지 등), 사례관리 □ 보훈, 자원봉사 등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면사무소 (도서지역)
시설(토목)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 도로관리, 건설행정, 지역계획, 상하수도, 건축허가, 개발 허가, 지도단속, 주거개선, 옥외광고물 등 면 시설사업 전반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면사무소 (도서지역)
해양수산	9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진흥, 수산지도, 수산증식, 자원조성, 해양관리 등 면 수산업무 전반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도서지역

2019년부터 2022년 감사일 현재까지 재직 이력이 있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내역과 담당직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웅진군은 [표1] 의 공고에 따라 신규임용한 일반임기제공무원 A 등 8명을 전보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최대 2차례에 걸쳐 전보 임용하였으며, B, C, D 등 3명에 대하여는 공고에 명시한 직무내용 외의 업무를 부여하는 등 일반임기제공무원 인사행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2.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피평가자의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으며, 평가의 항목은 영 제31조의2를 준용하여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근무실적 정기평가 소홀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임용약정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목표달성도에 따른 점수제 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평정 대상자가 달성한 전년도에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웅진군 ○○과는 2020년~2022년 [지방임기제(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정기평가) 계획] 을 각각 수립하면서 평가단계별 평가방법과 최종평정점 산출방법을 [표2]와 같이 명시하였다.

【표2】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방법

구분		평가방법	비고
평가단계	본인평가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근무실적에 대한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 평가→직근 업무감독자 제출	
	직근 업무감독자평가	성과목표평가서의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 평가→근평위원회 제출	
	근무실적평가위원회평가	상위공무원 중 3~5인 구성, 직근 업무감독자의 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 최종 평가	
최종평정점 산출		단위목표별 업무비중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 목표 달성도 평가 점수 + 실적가감점	

웅진군의 임기제공무원 평가 방법에 따라 각 기관(부서)의 평정 대상자들은 매년 성과계획서와 본인 및 직근 업무감독자의 평가점수가 기재된 성과목표평가서를 ○○과에 제출하였고 총괄부서인 ○○과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 또는 서면심의를 통해 최종평가를 시행하였다.

근무실적 평정자는 평정 대상자가 작성한 성과계획서상의 업무단위목표에 대하여 평정대상기간 중 달성한 근무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여 개인별 평가점수와 등급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정 대상자들이 최종평가 자료로 제출한 성과목표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당초 약정한 성과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평가기간 내 추진한 개인별 근무실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에도 ○○과는 이에 대한 자료의 보완이나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평정(안)을 상정하였다.

또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개인별 근무실적을 엄정하게 검토하여 평가한 후 평가방법에 따라 평정 대상자의 성과단위목표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각각의 업무비율을 곱하여 최종 평정점을 산출해야 할 것이나,

2020년과 2021년 위원회에서는 평정 대상자를 직급별로 구분하여 순위를 일괄

확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동일한 점수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점수 및 등급을 산출하였고, 2022년 서면심의에서는 평가위원들이 ○○과에서 제출한 평정(안)에 대하여 평가과정 없이 의결서에 서명하는 등 평정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임용기간 연장을 위한 최종평가 미실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1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제3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기간이 정기평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료하는 경우와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채 근무기간을 연장(임용약정 종료는 정기평가 결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임용약정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진군 ○○과는 정기평가 후 6개월 이내 임용약정기간 종료대상 임기제공무원 00명에 대하여 근무실적 최종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근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주의] ① 「지방공무원법」 등 임기제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임기제공무원 전보임용, 임용연장 최종평가 미실시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청원경찰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1. 청원경찰 운영 부적정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로서

같은 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옹진군 공무원근로자 정수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직종의 구분) 제1항 제4호는 청원경찰을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고, 제2항은 위 직종에 대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임의로 직종을 달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2년 4월 감사일 현재 옹진군에는 총 00명의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옹진군은 ○○과 A 등 8명에게는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직무를 부여하였으나 ▷▷과 소속 B와 C에게는 바다골재채취

지도단속 등 이에 위배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2. 기간제근로자 운영 부적정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웅진군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제4조(채용의 절차) 제3항에 따라 인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특히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웅진군 공무원근로자 정수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정수책정 승인 등) 제3항에 따라 정수관리부서 및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웅진군 ◆◆과(현 ◇◇과)는 20**.*.*.~20**.*.*.까지 인천●●●●●●●●●● 검표요원으로 근무하고 20**.*.*.일자 정년퇴직한 웅진군 소속 청원경찰 D(**.*.*)를 [●●●●●●●●●● 검표요원(기간제근로자)채용, ◆◆과-***** (20**.*.*)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채용하여 20**.*.*.부터 2022년 감사일 현재까지 동일 직무에 근무토록 하고 있다.

당시 ◆◆과는 「웅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에 따른 “웅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에 대한 운임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민 및 도서민 부정승선 방지를 위한 검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를 근거로 청원경찰 정년퇴직자 D를 기간제근로자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 협의절차 없이 채용하였고,

20**년부터 20**년까지 「여객선 부정승선 방지대책」을 수립, 인천●●●●●●●●●●과 6개의 면 ●●●●●●●●●●에 기간제근로자 D를 포함 공공근로자 등을 투입하여 검표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과는 20**년과 20**년에는 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모든 터미널을 대상으로 선표 조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반면 20**년도에는 인력을 대폭 축소하였고 20**년부터는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20**년~20**년에도 ‘여객선 부정승선 방지대

책 사업'을 근거로 하여 D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연장하고 승선자 검표를 위한 근로계약을 매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업담당 부서에 따르면, 현재 인천○○○○○○○○ 내 모든 승선자에 대한 검표는 보조금 수령자인 각 선사에서 2회에 걸쳐(발권 후 여객터미널 내 1회, 여객선 승선 전 1회)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 없이 동일직무에 이중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옹진군의 행정은 타당하다 볼 수 없다.

한편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옹진군 행정자치과는 해당 기간제근로자 채용연장의 적정성에 대하여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주의] 「청원경찰법」, 「옹진군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청원경찰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취득세(임대사업자, 명의신탁 등)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임대사업자 감면 관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감면받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웅진군 ○○과에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 ■리 ***-※번지 외1필지 *동 ***호(공동주택) 등 0개소의 취득세 등 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명의신탁 관리

구 「지방세법」 (2014.1.1., 법률 제12153호, 일부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2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구 「지방세기본법」 (2013.1.1., 법률 제12153호,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¹²⁾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 이내의 부과

12) 가산세 적용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가산세 40/100 적용(「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신설) (단, 2013.1.1.이전 취득인 경우 20/100 적용)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제2호 “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결정을하였다”고 판시하였다.¹³⁾

그러나 용진군 ○○과에서는 인천▷▷▷▷▷ 및 용진군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을 행한 명의신탁자 자료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 ■리 *****번지 외 2필지 등 0개소의 취득세 등 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3. 고급오락장 관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고급오락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제나목에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

13) 대법원 2007.5.11.선고 2005두13360 판결

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한다.

지방세 법령 고급오락장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본문에서 고급오락장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웅진군 ○○에서는 취득세 중과세율¹⁴⁾ 대상인 고급오락장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 ■리 *~**번지 0개소의 취득세 등 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4. 위법건축물, 가설건축물 관리

「지방세법」 제6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

14)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4%의 표준세율(본세)을 적용하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제7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증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증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증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증인일을 말하고, 사용증인서 또는 임시사용증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9조제5항에 의하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임시건축물의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웅진군 ○○과에서는 이행강제금 등이 발생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 ■리 ***-**번지 등 0개소의 취득세 등 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 ●리 ***-**번지 등 00개소의 취득세 등 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시정] 과세 누락된 임대사업자 감면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 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재산세(위법건축물, 임야)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위법건축물 관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당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하여야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옹진군 ○○과에서는 건축 관련 부서에서 확인된 위법건축물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면 ㉠㉠리 ***-*번지 A 등 0명의 재산세 등 0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토지(임야) 종합합산 관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과세대상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따르면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 상속 포함)하고 있는 종중 소유 임야(제2항제4호)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 상속 포함)하여 온 임야(제2항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분리과세 하여야 하고 이 기간 이후에 매매·증여 등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임야는 종합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 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 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그러나 웅진군 ○○과에서는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00명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저율의 분리과세 세율(1천분의 0.7)에서 종합합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ㄹㄹ면 ○○○리 산 ***번지 B 등 00명의 재산세 등 0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시정] 과세 누락된 위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 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주민세(재산분)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주민세 “재산분”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7월 1일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2배를 세율로 적용하며,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매년 7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옹진군 ○○과에서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C 등 00개 사업장에 대한 2019년~2021년 주민세 재산분 00건, 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시정] 과세 누락된 주민세 등에 대하여 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세외수입(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내 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정의에서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 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 와 함께 사전통지 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통지한 경감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경감되기 전의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5조에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 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 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용진군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어 본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A 등 0명의 과태료 0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시정] 본 부과되지 아니한 과태료에 대하여 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요구 및 권고

제 목 세외수입 체납금 압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등 8개 부서

내 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을 말하며,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8조(독촉) 및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독촉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미납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규정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 등 8개 부서에서는 변상금 건축법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신속한 체납처분¹⁵⁾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진군 ○○과 등 8개 부서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로 재산(부동산, 자동차)을 적극적으로 조회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조치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 00명, 체납액 00원에 대하여 재산압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시정] 압류되지 아니한 변상금 등에 대하여 00천 원을 조속히 압류하시고 다만, 압류 진행 시 시효소멸 여부를 확인 후 압류처분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세외수입 부서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체납처분 절차의 업무 숙지 미비로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관리 전담할 실질적인 부서가 필요한 바, 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5) 납세자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으로서 독촉, 재산압류, 매각 및 청산의 4단계 절차로 이루어짐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실

내 용

1.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종사자 근무환경 및 거주자 생활환경 개선, 인권보호,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1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에서는 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시설이용·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 하는 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사회복지시설이 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한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관련 [별표4]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3차 위반 시,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요양센터의 경우 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반드시 구성·운영 되어야 할 시설 운영위원회가 미구성되었고, ■■ 요양센터 등 0개의

시설은 운영위원회를 구성만 하였을 뿐,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2. 시설 종사자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반납 소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어린이집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2021년까지는 회계연도 종료(2월말) 후 3월 이내에, 2022년(지침개정 참조)부터는 회계연도 종료 후 5월 이내에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의 안정적 생활보장과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퇴직급여제도 운영 관리사항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웅진군 사회복지시설 퇴직급여제도 현황 확인결과, 노인복지시설 0개소의 경우 시설 설치신고일로부터 1년~11년 3개월이 경과된 감사자료 제출시점까지

도 퇴직근로자의 급여지급을 위해 반드시 설정·운영되어야 할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하지 않았고, 0개소는 설치신고일로부터 11년 경과 시점인 2022. *. *. 에서야 뒤늦게 가입하였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0개소에서는 퇴직 종사자 00명에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24일~111일이 경과된 시점에 지급하였고, 퇴직 간호조무사 A에 대하여는 2022. 4. 12 감사일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린이집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중 보조금 00원이 미반납 되었고 0개소, 0명의 퇴직적립 보조금 00원은 지침에 규정된 반납일로부터 192일~359일을 초과하여 반납되는 등 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이 저해되었음에도 웅진군 복지지원실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3.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 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 법인 및 시설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구축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합회계·고객(후원자) 관리, 예·결산, 후원금 온라인 보고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명확한 후원금 수입·지출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상 후원자 등록, 정기·비정기 후원금 입금등록, 후원금 회계 반영 등 일련의 업무처리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후원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자료 모두를 등록·관리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0조, 제41조의6을 근거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가 포함된 결산 총괄표, 세입·세출결산서,

사업수입·정부보조금 명세서 등 결산 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제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게시하는 경우, 군·구와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으로 같음하며 만일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5]를 근거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바, 군·구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사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웅진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이하. 보고서로 표기)·공개’ 현황 확인결과, 사회복지시설 0개소에서는 후원금 수입 모두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금등록하고 회계반영처리 하여 후원금 총수입 및 수입명세서가 일치되도록 해야 함에도, 후원금 수입명세서 입력 누락, 착오 입력 등 총 00건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자료를 온라인으로 보고하였으며,

웅진군 ○○실에서는 이와 같이 부적정 하게 처리된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려 처리하고,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반려된 내용을 확인 후, 수정 보고하도록 관리 해야 함에도, 부적정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수정 절차 없이 보고서를 승인 처리 하여 해당 자료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됨에 따라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 확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센터(요양)에서는 2022. 3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기한 을 초과하여 제출하였으며, 웅진군 ○○실에서는 사회복지시설 00개소에서 2020. 3월부터 2022.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기한 내 제출된 보고서를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함에도,

보고서 제출 및 승인 등 관련 감사자료 제출요구 시점에서야 미승인 사실을

인지한 후, 사회복지시설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53일~690일이 경과된 2022. 2월과 3월에 일괄 승인 처리함에 따라, 승인과 동시에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에 보고서가 공개되어지는 시점 또한 지연되거나 미공개 되는 등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공개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시정] 노인주거복지시설 우주실버타운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 운영위원을 임명·위촉하시고, 보조금에서 지출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퇴직종사자의 퇴직적립금 00원을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업무연찬(교육)을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실 등 8개 부서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장애인 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등록 장애인의 장애 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 하도록 해야 하는 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재판정기한 3개월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기한 내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판정기한 1개월 전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고, 촉구기한 내에도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에 근거하여 청문시작 10일 전까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우편 또는 교부방법으로 송달하고, 행정 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

만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호, 제5에 따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 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하며,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발송방법, 발송 연월일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청문 실시 결과,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청문결과 결정(장애인등록 취소)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반환기한 2주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고, 반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아울러, 용진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관련 장애인 등록 업무를 「용진군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면장에게 위임한 바, 사무를 위임받은 면장은 재판정 예정자 안내(통보) 소홀, 재판정기한 경과자 발생 및 기한 경과자에 대한 행정 절차 미이행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용진군 ○○실에서는 면장에게 위임된 장애인 지원에 관한 업무가 관련법령에 따라 착오 없이 수행되도록 재판정 예정자 및 기한 경과자의 업무처리 상태를 지속 관리·독려하고, 부적정 혹은 미처리 대상자에 대한 조치 안내 등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진군의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관리현황 확인 결과, 재판정(촉구) 미통보 및 통보지연, 기한 내 재판정 미이행자에 대한 재판정지연처리 등 00건의 부적정 처리사항이 확인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 등 0개 면에서는 재판정 기한이 도래한 등록 장애인 A 외 00명에 대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 또는 촉구 통보를 하지 않았고, ◎◎면 등 0개 면의 재판정기한 도래자 B 등 0명에게는 재판정 및 촉구 통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면 등 0개 면에서는 재판정대상자 C 외 00명에게 재판정 기한 3개월 전에 재판정 통보를 해야 함에도 기한 만료 33일~89일 시점에 재판정 이행을 통보하였고, ㉹㉹면 등 0개 면에서는 D 등 00명에게 재판정 기한 1개월 전 해야 할 촉구 통보를 기한만료 18일~29일 시점에서야 시행하였다.

또한, 재판정기한 경과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청문실시, 장애등록취소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에도, 용진군 소재 0개 면에서 재판정기한 경과자 00명을 청문 및 장애등록 취소 등 행정 조치 없이 대상자가 뒤늦게 재판정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 재판정 처리를 하였으며, 특히 ◆◆면과 ◇◇면에서는 장애 재판정 기한일을 경과한 E, F에 대해 재판정 기한일로부터 각각 144일, 299일이 경과된 시점에 재판정 처리를 하는 등 장애인의 의무적 재판정 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하였으며,

용진군 ○○실에서는 장애재판정 재판정·촉구 미통보 및 통보지연, 재판정 지연처리 등 면장에게 위임된 장애인재판정 업무가 부적정 하게 처리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주의]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에 대한 재판정 절차가 관련규정에 따라 추진 되도록 업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재판정 기한 경과자가 지속발생 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기초연금 환수 소홀 (2019년 옹진군 종합감사 현지시정 처분요구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제1조, 제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기초연금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고시된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기초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수급권자에게 통지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매월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만일,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법」 제17조,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규정된 데로 사망 혹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소득·재산 선정기준액 초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급권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다.

또한, 「기초연금법」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기초연금이 정지된 기간에 지급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바,

군수·구청장은 환수대상이 확인된 경우 환수 결정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처분사전통지서를 대상자(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납부의무자가 됨)에게 통보하고, 만일 제출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거나 진술내용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해 환수 결정하고, 환수대상자를 즉시 행복e음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환수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이 되도록 환수금에 대한 납입 고지를 해야 하고, 만일 그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일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을 하되,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하며, 독촉을 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환수대상자 재산의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용진군은 2019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중 ‘기초연금 환수대상자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직역연금 지원대상자 및 사망자 등 00명에게 착오 지급된 기초연금 00원을 환수하도록 현지시정을 통보 받은 바 있으나, 처분요구 이행사항 확인결과, 2022. 4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기초연금 일부가 미환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용진군 ○○실에서는 2019년 용진군 종합감사 ‘기초연금 환수’ 현지시정과 관련하여 2019. *. *. ‘2019 인천시 종합감사 처분사항 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처분사항 이행을 위해 관련규정을 근거로 2019. *. *. 대상자·부양의무자 확인, 2019. *. **. 환수결정, 2019. *. **, *. **. 납부고지 및 독촉, 2019. **. ** 미납자 체납처분 절차 이행, 2019. **월 ~2020. *월 압류·촉탁, 공경매처분, 징수금액 처리 또는 결손처분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납부의무자 조회요청과 일부 대상자에 대한 환수결정 통보 이외에 납입고지, 독촉, 체납처분 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환수대상자 0명에게 착오 지급된 기초연금도 환수되지 않았다.

미환수 대상자에 대한 그 간의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용진군 ○○과에서는 기초연금 환수를 위해 관련규정 및 자체계획에 따라 2019. *월에 환수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확인은 물론, 환수 결정 및 납입고지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환수대상자 A, B는 2019. *. **에서야 법정상속인 등 납부의무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조회요청 하였을 뿐, 그 이후 환수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추진하지 않다가 2022년 감사가 임박한 시점인 2022. 3월에서야 소멸시효(5년) 완료와 경제능력 상실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대상자 C, D에 대하여는 2019. *. ** 납부의무자 확인을 위한 자료조회 요청 이외에 2020. *월과 *월, 2022. *월 총 3차례에 걸쳐 형식적으로 환수결정 통보만을 하였으며, 대상자 E는 2019. *월 납부의무자 확인용 자료조회 요청 외에 2020. **월 가정방문만 한차례 하였을 뿐, 환수를 위해 추가적인 절차이행을 전혀 하지 않는 등 기초연금 환수금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시정] ① 기초연금 미환수자 0명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환수업무 처리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② 기초연금 환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경우, 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읍·면·동에서는 관련 서류를 신청등록하고, 군·구는 이를 즉시 접수처리 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민원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는 바,

만일, 수급권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추가 보완 요구와는 별개로, 접수 받은 신청정보 및 제출서류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급여신청일의 자동부여는 물론, 새울 민원행정 시스템에 급여종류별로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가 자동부여 되도록 해야 하며,

군·구의 통합조사 담당부서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즉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바,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등 조사대상 확인단계를 거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을 포함한 공적자료 조회를 요청

하여 조회된 자료를 우선 적용하되, 신청인이 해당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입증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자료등록 후 수정결과를 적용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를 하였을 때 지체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권자가 군·구에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 즉 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시작되며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로 책정된 날부터 개시되는 바,

군·구 통합조사 담당자는 신청 서류의 등록·접수, 공적자료 조회 및 결과 반영, 생활실태조사, 결과 처리 등 일련의 절차가 지체됨 없이 수행되어 최저생활 보장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적시에 급여지원이 되도록 조사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러나, 웅진군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현황 확인 결과, ‘신청일, 접수일,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요청’ 등 절차이행을 지연 처리함에 따라, 생계곤란 등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조속히 제공되어야 할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뒤늦게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신청조사 부적정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웅진군 ○○실 □□팀에서는 A 등 00명의 신청서류를 신청일로부터 4일~238일이 경과된 시점에 접수처리 하였으며, 이들 중 신청인 B의 신청서 접수현황 확인결과, 신청서를 제출받은 ◆◆면 업무담당자가 20**. *. **에 제출된 서류의 신청등록을 누락하였고, 이후 자

료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후 20**. *. **에서야 신청서를 등록·접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웅진군 ○○실은 접수 처리된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 조회를 포함한 공적자료 조회를 신속히 요청해야 함에도, 금융재산은 00건, 공적자료는 00건을 지연하여 조회요청 하였고, C 등 0명은 금융재산 조회요청을 누락하였으며,

특히, 신청인 D의 경우 조회 요청일로부터 회신까지 1개월 가량 소요되는 금융재산자료가 조사담당자의 업무소홀로 급여 신청일(20**. **. **)로부터 84일이 경과된 시점(20**. *. **. **)에서야 조회 요청됨에 따라 자료회신이 지연되었음에도, 20**. *. **과 20**. *. ** 두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회신 지연에 따른 보장결정 지연’을 사유로 시스템에 민원처리기한 연장을 등록 처리하였고, 신청인에게도 민원처리기한 연장사유를 ‘금융기관 자료조회 요청지연’이 아닌, ‘자료회신 지연’으로만 사실과 다르게 통보하였다.

위와 같이 웅진군 ○○실 □□팀에서는 수급자 신청에 따른 등록·접수·조사 등 절차를 지연 처리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 00명의 수급자 선정이 신청일로부터 100일~31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00명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시기도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들 중 00명은 생계급여와 동시에 의료급여를 신청한 대상자로, ‘급여 신청일’부터 급여가 개시되는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급여 선정일’에 개시되는 만큼 의료급여 선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절차를 수행해야 함에도, 의료급여 선정 지연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질병·부상 등 의료서비스 제공 시점 또한 늦춰지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체함 없이 수행해야 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업무가 부적정 하게 처리되었음이 금번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 [주의]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가 이행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②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급여 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급여 신청일’을 ‘급여 개시일’로 하여 신청 월의 급여 전부를 지급하며,

급여자료 생성일인 매월 15일 이후에 보장결정 되어 월 말에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하고, 급여 지급에 앞서 군·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생성된 급여 내역에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또한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4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하되, 만일 생계급여 신청자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군수·구청장은 수급신청자의 연금 수령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실제소득으로 반영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에 따라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의 주거가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장시설,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노인복지주택, 그 밖에 보장시설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바,

보장시설에 입소 후 기초수급을 신청한 자가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시설 생계급여 집행방법에 따라 신청 월의 생계급여를 보장시설에 전액 지급하며, 기초수급 신청 후 보장결정 이전에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시설 입소일이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 생계급여의 50%, 16일 이후에 입소하면 해당 월 생계급여 전부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입소한 보장시설에는 입소일 부터 일 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시설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의류·신발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설의 급여 신청(보장시설수급자 명단 포함)과 시설 담당부서의 확인절차를 거쳐 보장시설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시설 담당부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연도별로 제시된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 급여 지급기준’ 준수는 물론, 매월 정기 보장 결정 시점의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이 아님)을 기준으로 시설 생계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복지시설대장’에 현원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신규 선정된 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급여지급 지연으로 수급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 생계급여 신청 및 지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자가 생계곤란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여 「긴급복지지원법」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동시 신청한 경우,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결정전까지 우선적으로 긴급지원이 가능하며,

추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 결정되어,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지급 되는 기초 생계급여와 우선 지원되고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긴급지원금 일할분과 생계급여를 비교하여, 해당 월의 긴급 생계지원액이 기초 생계급여보다 많으면 긴급지원금만 지급하고, 긴급지원금이 생계급여보다 적으면 차액분의 생계급여를 추가 지급되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착오 없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법령·지침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군·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가 있을 경우 군·구에서는 이를 소급지급 해야 하고,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웅진군 ○○실에서는 수급자 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해야 할 공적이 전소득 0건을 누락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착오산출 되었고, 보장결정 월에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할 00건의 급여가 지급지연 되었으며, 신청월 기준 소급지급 소홀, 기초 및 긴급 생계지원 동시 신청자에 대한 급여 착오산정 등으로 인해 00건의 급여가 미지급 혹은 과소·과다하게 지급되었다.

생계급여 부적정 지급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웅진군 ○○실에서는 A 등 00명에게 수급자 선정 월에 지급하여야 할 생계급여를 1개월~1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지급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생계지원을 위해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B 등 0명의 생계급여 00원은 수급자 선정 월부터 2개월~11개월이 경과된 감사시점까지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C 등 0명에 대하여는 생계급여를 착오 계산하여 00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D 등 0명의 생계급여는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00원이 과다하게 지급 되었다.

특히, 웅진군 ○○실에서는 2021. *. * 시설입소 후 2021. *. ** 기초 생계급여를 신청한 E의 총 소득이 00원(국민연금 00원, 기초연금 00원)으로 2021년 1인가구 기초 생계급여 선정기준액(548,349원)을 초과함에 따라, 2021. *. **에 ‘본인 희망에 따른 자격변동’을 사유로 기초연금을 보장중지 처리한 후 2021. *월부터 변경된 가구

소득(0원→0원)을 최종 반영하여 2021. **. **에 기초 생계급여에 대한 보장결정처리를 하였음에도, 기초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 해당 되는 기간(2021.*~*월)에 생계급여 00원을 E가 입소 중인 시설에 소급하여 착오 지급하였다.

또한, 용진군 ○○실에서는 2021. *. *일에 기초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신청한 F에 대하여 기초 생계급여 보장결정 전, 먼저 기초연금 보장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가구의 실제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기초 생계급여 보장적합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나,

기초 생계급여 신청자 F가 2021. **. ** 기초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월 00원을 지급받게 되었음에도, 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반영 없이 해당가구의 기존 소득 400,000원만으로 기초 생계급여 보장적합 여부를 결정·통지한 후 2021. **. **에 생계급여 00원을 착오지급 하였으며, 이후 2021. **. *에서야 F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장중지 처리를 하는 등 기초 생계급여 지급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아울러, 용진군 ○○실에서는 매월 정기보장결정시점의 시설 수급자 현원을 기준으로 1인당 월급여액을 적용하여 생계급여 지급을 해야 함에도, 2022. 4월 감사시점까지도 ㉠㉠요양원 등 0개 시설에 시설 수급자 정원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부식비 등 시설 생계급여가 과소 지급되는 등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숙지 없이 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시정] ① 과다 지급된 생계급여 00원은 회수하시고, 미지급되거나 과소 지급된 생계급여 00건, 00원에 대하여는 지급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생계급여가 과소 지급된 보장시설 0개소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기준,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여 소급지급 하시고, 직무교육을 통해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③ 수급자 생계급여 미지급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실 등 4개 부서

내 용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소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아울러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옹진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제13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시스템관리자는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별지 서식 ‘사용자계정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웅진군에서는 ◆◆부에서 구축하여 보급한 차세대통합업무지원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련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해당 시스템이 접근권한 기록 보관·조회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관리 소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¹⁶⁾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웅진군에서는 ◎◎◎ 발행 등 0개의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함에도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미작성,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 위탁사항 미공개 등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다.

16)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시정] ① 차세대통합업무지원시스템의 접근권한 기록·조회 기능 제공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시고 기능 제공 전까지는 접근권한 관련 내역을 관리대장으로 별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에 대해 위탁계약서 작성,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위탁사항 공개 등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등 7개 부서

내 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6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등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파기일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도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옹진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열람·파기에 대한 기록을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제공’은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열람’은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파기’는 자동 삭제를 포함하여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옹진군에서는 ‘개인영상정보 운영방침’에 표기된 보관기간과는 다르게 파

기 기록을 관리하거나 자동 삭제의 경우 파기 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등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소홀히 관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주의] 개인영상정보 자동 삭제의 경우 파기 주기에 맞게 삭제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시기를 기록하는 등 이용·제공·열람·파기에 대한 기록을 빠짐없이 관리대장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실 등 20개 부서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①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 ②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9조(안내판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①설치목적 및 장소 ②촬영범위 및 시간 ③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④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CCTV 설치 안내 (예시)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종 복도(360° 회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0000과 홍길동 (032-000-0000)
- 수탁관리자 : 0000업체 박길동 (032-000-0000)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췌

그러나 웅진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에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기재하여야 할 설치장소,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안내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시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에 설치장소, 수탁관리자 등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시고, 법령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용진군 홈페이지에 안내판 기재사항을 게재하는 등 안내판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권 고

제 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관 등 20개 부서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8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자¹⁷⁾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¹⁸⁾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아울러 옹진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제3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따르면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17)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

18)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 목적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용진군에서는 ◇◇과 등 00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하면서 장애 발생 시마다 업체를 통해 조치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함에도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작성,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용진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이 필요한 부서에서 각각 설치를 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운영 대수가 많지 않아 연간계약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실정이고, ◆◆실 등 일부 부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관실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이를 확대하여 용진군 전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 유지관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권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에서 각각 관리함에 따라 일부 부서의 경우 위탁계약서 미작성,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교육 미실시 등 개인정보 보호업무 추진이 소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개인영상정보 관리를 위해 통합 관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기관경고·주의 요구

제 목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실 등 7개 부서

내 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¹⁹⁾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같은 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2021.12.31.현재 총 7개의 기금을 조례에 따라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1. 기금수입 처리 부적정

「지방회계법」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의하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입의 징수는 「지방회계법」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19)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하되, 특히 기금의 수입처리 등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제1항에 의해 기금운용관이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징수의 방법은 징수관(기금운용관)이 「지방회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제1항에 따라 세입의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 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금액, 납부기간 및 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²⁰⁾를 하고,

아울러, 납부 고지한 수입금을 수납한 수입금출납원(기금출납원) 또는 금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및 제22조(금고에서의 수납)에 따라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기금운용관)에게 수납 보고를 하여야 한다.

기금을 운용하는 각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특히 수입금의 부과, 징수결의, 납부고지, 수납처리 등 기금 수입처리 전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절차와 형식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용진군 기금수입금 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각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수입금 부과, 징수결의, 납부고지, 수납처리’의 회계절차를 미 준수한 결과, 징수결의 누락 등 기금운용 업무를 부실하게 추진하였다.

20)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제2항 ‘2호 납입고지서, 3호 납부서, 4호 납입서’ 등의 고지서 발부

※ 고지서의 분류(참조: ‘지방세외수입업무 해설집’(2021.6. 행정안전부))

분류	내용
납입고지서	- 사전 징수결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입을 위한 것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함 - 재산임대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납부서	- 수입과 동시에 징수결정하는 수입은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않고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징수함 - 기부금, 보조금, 이자수입, 전입금, 기타 사전에 징수결정하기 곤란한 수입
납입서	- 수입금출납원이 영수한 현금을 시·도 금고에 불입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서에 의하여 납부

가. 수입금 부과, 징수결의, 수납처리 누락

○○실 등 0개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연도 내 발생한 수입금의 부과·징수결의 00건 및 수납처리 00건에 대하여 당해연도 등록처리를 누락하는 등 업무를 해태함으로써 회계연도별 결산보고 시 실제 수입액과 징수부 상 수입액이 불부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징수결의 날인 누락

징수결정은 납세의무자 또는 각 개별 법령이나 계약 기타의 사유로 납입의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기로 하는 독립적인 행정행위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으로, 수입금의 징수결의는 기금운용관이 부과한 금액에 대하여 징수결의서에 결재를 완료함으로써 확정하여야 하나 ○○○기금을 운영하는 ○○실 등 0개 기금운영 부서에서는 총 00건의 수입금에 대한 징수결의 날인을 누락하였다.

다. 납부고지서(납부서) 미발부

기금담당부서는 기금의 수입을 징수 결정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5조(납입고지서)에 따라 납입기한이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납입기간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납부서²¹⁾)는 징수결정의 때에 발부해야 한다.

그러나 ○○실 등 0개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전입금 등 수입 00건에 대해서 납부고지서(납부서)를 발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회계연도 내 기금 수입처리 부실에 따른 결산 부적정

기금운용관은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제15조(결산서의 구성),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21) 납부서: 기부금, 보조금, 이자수입, 전입금, 기타 사전에 징수결정하기 곤란한 수입

및 결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기금 결산보고서의 수입내역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1항에 따라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지출내역에는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 등 0개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회계연도 내 발생한 수입금의 징수결의 누락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회계연도 결산서 기재금액의 실제 수입금액과의 불부합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차액이 발생한 결산금액을 임의로 등록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기금운용을 부적정 하게 처리하였다.

3. 징수보고 소홀

「지방회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5조에 따라 징수관(기금운용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 등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금고는 「지방회계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6조, 제117조에 따라 출납에 대한 일계표는 그 다음날, 월계표는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기금운용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월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금고로부터 수입 일계표 및 월계표를 제출받아 기금출납을 관리한 사실이 없는 바, 기금운용에 따른 징수보고 등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기관경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어 엄중 경고 하오니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방회계법」 등 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입, 결산, 징수보고 등의 기금운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 직원 업무 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면 ‘야간 및 휴일 진료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면’ 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조합’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야간 및 휴일 진료서비스 사업’(이하 ‘야간진료사업’이라 한다.)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민간경상보조(편성목)로 추진하고 있다.

1. 사업 운영시간 준수 관련

감사기간 동안 ‘야간진료사업’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첫째, 일요일은 사업계획서의 운영시간인 진료 시작 시간 오전 9시가 아닌 9시 30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²²⁾ 둘째, ㉠㉠센터 2층에 위치한 ㉠㉠의원 2022.4.25.(월) 21:30 병원 전경사진 촬영 결과 병원은 소등이 된 상태로, 야간 운영여부를 확인코자 2022.4.27.(수) 22:31에 진료 가능 여부를 전화 문의한 결과 ‘코로나 이후 2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통화는 할 수 있었으나, 야간진료사업의 운영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소홀히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지방보조금사업의 적정성 여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22) 2022.4.23.(토) 17:46 영흥우리들의원 통화: 일요일 진료시간 문의결과 9시30분부터 진료시작 이라고 답변함.

운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하며 법령²³⁾에 명시적 근거²⁴⁾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²⁵⁾로 교부 할 수 없으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 에서도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1]지방보조금의 종류

구분	지방보조금의 종류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Ⅱ. 사업유형별 지침 14.민간보조 사업에 따르면 민간단체는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인건비·운영비 지원은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보조 제외사업으로는 자체적인 수입증대 또는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충당이 가능한 사업, 사업단체 등 임의설립 기관에 대한 연례적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지원을 지양하고 있다.

따라서 옹진군은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

23)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으나,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한하여 이를 법령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24) ‘법령에 명시적 근거’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의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나,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된 규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부서)의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의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 통보」(행전안전부 재정협력과-3744호, 2021.10.28.))

25) 「지방보조금법시행령」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류)에 따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류는 1.인건비 2. 사무관리비 3.임차료 4. 수행사무 및 사업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업)제1항〔별표1〕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에 따른 야간진료사업의 운영비 지원 가능여부에 대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서 정하는 바를 검토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옹진군에서는 진료서비스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금 사업비가 인건비 및 임차료임에도 운영비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관련 법령의 검토 없이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다.

3. 예산의 교부신청 및 결정 관련

관리기준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옹진군 ◇◇면에 위치한 ㉠㉠조합은 ◇◇면 야간의료서비스의 부재 및 관광객이 많은 지역 특성으로 인한 주말 응급환자 발생 시의 교통 정체에 따른 이송 어려움을 사유로 조합원 000명의 서명을 받아 20**.*.**,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지원 요청의 건(문서번호 *****-*)’에 의하여 보조금 사업을 요청하였고,

옹진군에서는 ㉠㉠조합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운영비 지원사업’을 20**년 *월부터 시작하였으며, 2019년~2021년 기간 동안 총 00원의 보조금을 인건비 등으로 월별 신청에 따라 교부하였다.

관리기준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와 함께 사업의 개요, 사업수행계획, 금액산출기초, 경비사용방법,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및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 산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시

관리기준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제3항에 따라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관리기준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진군에서는 2019년~2021년 기간 동안 ㉠㉠조합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서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를 한 번도 제출받은 적이 없으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4.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보고 관련

가. 보조금 관리통장 운영 및 집행의 적정성

관리기준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의 사업에 1개의 통장을 별도 개설하여 교부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며,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부 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금 입·출금 통장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안되며, 지출시에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하게 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

저히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조합은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첫째,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인건비 등을 직접 이체하지 않고 ‘㉠㉠조합 ●●의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사업비를 일괄 이체하여 사용하였으며 둘째, 전용계좌에서 인출 시에도 지출결의서에 대표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담당자의 결재만으로 인출하였고 셋째, UMS수수료(입출금알림 수수료)를 2019년~2021년 기간동안 00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으며 넷째, 자기부담금이 있음에도 교부신청 시 자부담이 예치된 통장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관리기준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3조(실적보조서의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내역별·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에 따르면 보조금 사용에 따른 증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87호)」 제8조(정산보고서의 작성)제3항에 따르면 정산보고서에는 보조비목 보조세목별 사용명세서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웅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정산시 지참물은 ①정산보고서 ②지출결의서(원본) ③ 영수증(원본) ④보조금 통장(원본 및 사본) ⑤카드사용 매출전표 ⑥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웅진군에서는 첫째, ㉠㉠조합에서 종이문서로 제출한 2019년~2020년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문서접수도 하지 않고 보관하였으며 둘째, 보조금사업비 정산시 인건비 지급에 따른 인건비 계좌이체 내역 이외에 소득세 포함 각종 보험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자기 부담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셋째, 2019년~2020년 보조금사업으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사업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을 완료해야 함에도 1년~2년이 지난 후 반환조치를 하는 등 보조금사업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다.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리기준 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제1항제2호에 의하면 공모에 의하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 한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도 주요 점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웅진군에서는 야간진료사업이 공모에 의하지 않고 보조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임에도 2020년~2021년 기간 동안 집행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라. 보조사업자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

관리기준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따르면 보조금사업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액이 있을경우 교부신청서와 함께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같은 기준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2021.9. 산업통상자원부)」 [붙임 1] 보조금 교부조건 9.보조사업 발생에 따른 수익금 처리에 따르면 지역주민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물과 재단 등에서 발생한 보조사업에 따른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진군에서는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이 2019~2021년 00천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의 반환 또는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용 등의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명시적 조건 없이 교부함으로써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의 처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마. 보조사업자 자기부담금 집행에 관한 사항

관리기준 제1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조 제4항에 따라 민간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지방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의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용진군에서는 보조금사업 교부 시에도 자기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실적 보고 시에도 자기부담금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야간 및 휴일 진료서비스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하시고, 보조금사업 추진 시 수입금의 처리 등 보조금사업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아울러, 직원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징계·시정 요구

제 목 ●●-◆◆ 평화도로 기념탑 설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²⁶⁾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나,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항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을 시설 외부에서 광고 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지역의 시장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 공공단체가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정하는 표시·설치기준²⁷⁾ 등에 맞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시장 등과 미리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옥외광고물 허가대상 및 제외대상

구분	일반 옥외광고물	공공목적 옥외광고물	비 고
	허가 대상	허가 제외 대상	
벽면이용간판	한 변의 길이 10m 또는 건물 4층 이상 타사광고	청사 내 벽면·옥상·지주 이용간판 중 하나 선택	
옥상간판	모든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높이 4m 이상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재난문자전광판, 안보·범죄신고 홍보목적 등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면적 30㎡ 초과	모든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자료출처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재구성

A는 2019. *. **부터 현재까지 ○○과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B는 2019. *. **부터 2020. *. **까지 □□팀 실무책임자로, C은 2019. *. **부터 2020. *. **까지 □□팀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6)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규격은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하며**, 보도가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7) 청사·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청사·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주요 시책 홍보용 가로등 현수기·육교 설치 현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재난문자전광판, 국가안보·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 교통관련 안내전광판 등은 관할 지자체와 미리 협의하면 설치 가능(옥외광고물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웅진군은 ■구 ㉠동 ****-**번지에 기둥 높이 15m의 지주 이용 간판 유형의 “○○-◆◆ 평화도로 기념탑” 설치를 위하여 20**년부터 20**년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물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웅진군은 “인천㉡고속도로 야립광고판 설치”를 위하여 ■구청(㉢과, ㉣과), ㉤청, ㉥공사에 사전의견 조회(○○과-****, 20**.*.*)를 하였으며, ■구청(㉣과) 및 ㉥공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을 통보받았다.

□ 야립광고판 사전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내용

회신 기관	검토의견
■구청 (㉣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 조례 9조에 의거 설치 불가 ※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 만 표시 할 수 있음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고속도로 주변 대형 지주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제4항에 의거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수행(02-3274-2842)
㉥공사 (㉦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고속도로는 을 인천㉡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운송의 주도로로 과도한 광고판 설치는 운전자의 시야방해, 주의력 분산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 주변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요임 ○ 따라서, 인천㉡고속도로 주변 야립광고판 설치를 지양해주시 바라며, 공항구역 인접 지역에 광고판 설치시에는 고도제한 해당 여부를 협의하기 바람

※ 자료출처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중구청 도시개발과, 경제자유구역청 : 미회신)

이후 B는 당시 실무담당자(D)와 함께 ■구청 ㉢과²⁸⁾ 옥외광고물 인허가 담당자에게 ㉠동 ****-** 등 총 0건의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관련 사전협의 요청하였으나, ■구청 ㉢과로부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²⁹⁾ 및 동법 인천광역시 조례 제9조³⁰⁾에 따라 “설치 불가”하다는 검토 의견을 안내받았다.

이후, ■구청(㉢과)은 웅진군 ○○과에 협의 대상 중 ㉠동 ****-** 등 0

28)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리 업무 : ㉣과 → ㉢과 (2018.7.1.)

29)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은 너비가 6m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음

30)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은 윗부분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하며,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보도가 없는 장소는 10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함

건은 공항시설이므로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설관리청(●●공사)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웅진군 ○○과는 20**년 *월 **일 ●●공사에 “■□선착장 부근 ◆◆면 관광 홍보물 설치승인 요청”(○○과-****호) 하였다. 승인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웅진군은 관광 홍보물의 규격 및 예시를 제출하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면 관광 홍보물임을 명시하였다.

웅진군의 승인요청에 대하여 ●●공사는 승인 요청한 후보 부지 0개소 중 첫 번째 후보지(現 ●●-◆◆ 평화도로 기념탑 설치 위치)에 설치가 가능하나, 승인조건으로 해당 부지는 장애물제한표면 제5활주도로 진입표면에 해당하여 홍보물을 해발 15m 내외로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관련 승인절차를 완료한 후 토지사용승인 신청할 것 명시하여 통보(●●공사 □□처-****, 20**.*.**.)하였다.

이후 20**.*.**.자 인사발령에 따라 “●●-◆◆ 평화도로 기념탑” 사업을 담당하게 된 C은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의견에 따른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토지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 평화고속도로건설 기념탑 설치공사 발주계획(안)을 먼저 수립(○○과-*****, 20**.*.**.)하여 웅진군수까지 내부결재를 득한 후 ■□과에 계약의뢰(○○과-*****, 20**.*.**.) 하였다. 이때 첨부한 시방서를 확인한 결과 “●●-◆◆ 평화도로 기념탑 설치공사” 추진 배경으로 ●●-◆◆ 평화도로 건설 기념탑을 홍보하고, 웅진군의 홍보 매체 개발을 통한 홍보활동 활성화 등 홍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임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B는 ●●공사의 승인조건에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관련 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토지사용승인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에 부지사용승인 신청 문서를 직접 기안하여 A에게 결재를 올렸다.

그리고 A는 관련 법령 및 ●●공사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였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하여 ●●공사에 부지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웅진군이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한 사항, 발주계획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을 보면 “●●-◆◆ 평화도로 기념탑”은 ●●-◆◆ 평화도로 건설을 홍보하고, 웅진군의 홍보 매체 개발을 통한 홍보활동 활성화 등 홍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임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 평화도로 기념탑”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웅진군은 기념탑 설치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했음에도,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한 내용 및 관계기관의 승인조건 등을 간과하고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법 부당하게 기념탑 설치사업을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C은 문답조사에서 기념탑을 설치하려는 부지가 ㉡ 부지에 해당하여 옥외광고물 허가권자가 ●●공사라고 생각하여 ●●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B는 문답조사에서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사에 문의한 결과 ㉡시설 내부에 조형물 설치 시 조건만 맞는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공사의 승인만 득하면 기념탑 설치가 가능 한것으로 판단하여 추진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C은 문답조사에서 ㉡ 소음 피해가 큰 ◆◆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로

인하여 ◆◆면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설치 방안을 검토하던 중에 B에게 ●●공사로부터 ■■선착장 부근에 기념탑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이후 ●●공사에서 부지사용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기념탑 설치 과정에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견에 대한 판단 B는 ■구청(☒☒과)에 ①①동 ****-** 등 총 0건의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관련 사전협의 요청하여, ■구청 ☒☒과로부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³¹⁾ 및 동법 인천광역시 조례 제9조³²⁾에 따라 “설치 불가”하다는 검토 의견을 안내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①①부(■과)에 ‘■■선착장 부근 공공목적 옥외광고물 설치신고(허가) 관련 질의’ 문서(○○과-****, 20**.*.**)를 통하여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관련 법규 해석에 대하여 질의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①①부는 용진군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도록 하였으며, 용진군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내받았다.

구분	주요 내용
질의(용진군) (1AA-****-*****) 20**.*.*.	용진군이 지주형 옥외광고물 설치할 ■■선착장 부근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 지역에 해당되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같은 조항에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착장 및 인근 주차시설(50대 이상 주차가능)과 상업목적 건물이 있어 휴게소로 해석할 수 있다면 관광 홍보를 위한 지주형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가 가능한지?
답변(①①부) (2AA-****-*****) 20**.*.*.	선착장에 주차공간이 있다고 하여 이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카목 단서에 따른 휴게소로 볼 수 없음

31)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은 너비가 6m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음

32)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은 윗부분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하며,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보도가 없는 장소는 10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함

B, A는 ●●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선착장 부근에 기념탑은 설치 가능하다는 의견을 확인하여, ●●공사의 토지 사용승인만 득하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념탑은 어떤 뜻깊은 일을 오래 잊지 아니하고 간직하기 위하여 특정한 일, 상징적인 특정 장소를 나타내는 등의 목적으로 세우는 건축물로서, 통상적으로 동상, 조각, 기념비 등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웅진군이 설치한 “●●-◆◆ 평화도로 기념탑”은 평면판 11m × 5m, 기둥 높이 15m 규격, 4면이 광고면인 형태로 되어 있다.

높이 4m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을 기념탑이라고 주장하며, ●●공사의 토지 사용승인만 득하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공사에서 웅진군에 통보한 “■■선착장 관광 홍보물 설치승인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공사 □□처-****, 20**.*.**.)에 승인조건으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관련 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토지 사용승인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관련 승인 절차를 미 이행하고 ●●공사에 토지 사용승인 신청하였다.

이처럼, 웅진군은 관련기관(■구청, ○○부)과 사전협의 하면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인·허가 조건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공사의 승인조건(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관련 승인 절차 완료)으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승인절차 대상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공사의 토지 사용승인만 득하면 이외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의견은 인정할 수 없다.

2. 공작물 설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공항시설법」 제10조에 따르면 공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

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에 관한 허가 및 변경 허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평화도로 기념탑” 설치의 공작물 축조 행위로서 ㉞청 또는 관할 구청(■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번 종합감사 기간 이후 동 사항에 대하여 ㉞청에 질의한 결과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개발사업 중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공항시설법」 제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관할 구청에 신고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웅진군은 “●●-◆◆ 평화도로 기념탑” 설치 행위 당시 ㉞청에 관련 허가에 관하여 확인하였더라면, ㉞청의 의견에 따라 ■구청에 신고해야 했으나 관련 행정적 절차를 소홀히 하여 공작물 설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미 이행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웅진군은 기념탑 설치위치가 ㉞부지이므로 공작물 설치 허가 또한 ●●공사의 승인 및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당시 ●●공사 ㉞처에 공작물 설치 행위 허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공사에서 ㉞청에 의견조회 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아서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견에 대한 판단 기념탑을 설치하려는 위치가 ㉞시설 부지임을 인지하였다면 「공항시설법」 및 동법 시행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허가권자(㉞청 또는 관할 구청)에게 협의를 하여야 하나, 허가 권한이 없는 ●●공사와 협의함으로써 이행해야 할 행정절차를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공사에서 웅진군에 통보한 ‘■선착장 부근 기념탑 설치 관련 부지사용 승인’ 문서(㉞처-*****, 20**.**.*)를 확인한 결과 부지사용승인조건에 관

런 인허가 사항(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및 환경·안전 관련 법규 및 公社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에 의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고지한 사실이 있다.

C은 ●●공사의 ‘■●선착장 부근 기념탑 설치 관련 부지사용 승인’ 문서를 접수하여 B, C에게 선결보고 하였다.

그리고 B, C는 ●●공사의 ‘■●선착장 부근 기념탑 설치 관련 부지사용 승인’ 문서를 접수 결재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웅진군은 ●●공사의 부지사용 승인과는 별개로 공작물 설치 행위에 관한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간과하여 인허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당한 허가권자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의 부지사용 승인조건도 간과하고 임의 판단하여 공작물 설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미 이행한 웅진군의 의견은 인정할 수 없다.

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법 제9조에 따르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등 동법 시행령 제36조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광고물 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점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9조의2에 따라 시장 등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진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 평화도로 기념탑”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최초 표시일(준공검사 완료일 : 2020.**.**.)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그 결과 불법 옥외광고물인 “●●-◆◆ 평화도로 기념탑”은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설치 후 현재까지 안전점검 없이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용진군은 “●●-◆◆ 평화도로 기념탑” 설치·관리자로서 공중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강풍에 의한 추락·전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용진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조속히 관련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불법 공공광고물 정비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E는 2020. *. **부터 현재까지 ■■■팀 실무책임자로, F는 2020. *. **부터 2022. 1. 12까지 ■■■팀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용진군은 ■구청으로부터 도로변에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 평화도로 기념탑”은 불법 공공광고물에 해당하니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라는 「도로변 불법 공공광고물 설치 금지 및 정비 안내」 문서를 총 2회(2020.**.*, 2021.**.*)에 걸쳐 통보받았다.

이에 대하여 용진군은 2020년 **월 **일 1안) 기념탑 관내 이설 또는 원상회복, 2안) 기존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안으로 ●●-◆◆ 평화도로건설 기념탑 대응관련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진군수까지 보고 후, 2안) 기존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안

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F는 공작물 본래 목적에 맞게 시안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 평화도로건설 기념탑 시안 변경 계획(안)’ 문서를 기안 [○○과-***** (2021.**.**)] 하여 E, A에게 결재를 올렸다.

그리고 E, A는 F가 결재 올린 불법 공공광고물에 대한 시안변경 계획(안)을 그대로 최종 결재하여 총 00천원의 예산을 들여 ‘●●-◆◆ 평화도로건설 기념탑’의 시안을 변경하였다.

웅진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공공광고물에 대한 적법한 조치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함에도, 관련 법령 검토 및 □구청의 의견 조회 등의 절차 없이 임의 판단 하여 불법 공공광고물로 정비대상인 ‘●●-◆◆ 평화도로 기념탑’에 약 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안을 교체한 후 감사기간 현재까지 불법으로 존치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웅진군은 ‘●●-◆◆ 평화도로 기념탑’ 자체정비 계획으로 이설 또는 철거를 검토하였으나, 당장 이설 장소 및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이설 또는 철거할 때까지만 이라도 당시 실행할 수 있는 최선책을 강구하려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관광홍보 예산 집행잔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광고물로서 부적합한 광고 이미지를 공작물 설치 의도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여 기념탑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조속히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도 하반기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견에 대한 판단 ‘●●-◆◆ 평화도로 기념탑’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

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공공목적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주요 시책 홍보용 가로등 현수기·육교 설치 현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재난문자전광판, 국가안보·범죄 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 교통관련 안내 전광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안과는 상관없이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한 불법 공공광고물이다.

따라서, 불법 공공광고물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 평화도로 기념탑’에 예산을 투입하여 시안을 교체한 후 현재까지도 이설 또는 철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불법으로 존치하고 있는 행위는 적정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5.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용진군은 예산이 수반되는 “○○-◆◆ 평화도로 기념탑”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간과하여 위법 부당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하여 총 00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설치·운영한 “○○-◆◆ 평화도로 기념탑”이 불법 옥외광고물 및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여 정비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용진군은 目目 소음피해로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 평화도로 기념탑”을 꼭 설치해야겠다는 의욕이 앞서 관련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나, 본 사업은 존치기간이

2024년 10월 31일까지 정해진 사항이었으며 이후 이설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견에 대한 판단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국토 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일반 광고물과의 법 적용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법 등 일부 개정으로 공공목적 광고물 역시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법적용으로 설치가 엄격해졌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도 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물, 지주 이용 간판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러나 용진군은 “○○○-◆◆ 평화도로 기념탑” 사업에 총 00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련 법령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관리하여 그 존치 기간을 다하지 못하고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철거를 앞둔 상황이다.

이는 용진군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장소 및 규격 등에 관하여 검토 후 준수하였다면 애초에 설치하여서는 안 되는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예산을 사용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시정] 도로변에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공공광고물을 조속히 정비하시고, 앞으로 광고물 설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 등 행정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불법 광고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E, F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A, B, C를 각각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지방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등 6개 부서, 인천광역시(□□과 등 4개 부서)

내 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보조금 사업은 법률 및 관리기준에 따라 [표]와 같이 절차를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표】 보조금 정산 운영 절차

정산보고	정산확정	반납계획	반납통보	국·시·비 반환
사유(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등)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정산금액 확정 등	발생이자 산정 등 반납계획 제출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부처 또는 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부처 또는 시)	보조사업자

그러나 2019년부터 감사 기간까지 웅진군의 보조금 정산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정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방보조금 미반납 사유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웅진군은 정산 관리를 소홀히 하여, 0건은 보조금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체하였으며, 0건은 현재까지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0건은 정산 확정 통보를 받은 후 반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반납처리 하지 않았다.

그 밖에 사업부서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0건은 사업부서에서 정산지침을 미시달하여 현재까지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것이며, 0건은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부서에서 정산 확정을 미이행하였다.

또한 0건은 웅진군이 반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부서에서 고지서를 미발행하여 현재까지 반납처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웅진군수는

[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 후 확정된 미반납액(00천원)에 대해서 반납하시고, 현재까지 반납액이 미확정인 보조사업은 정산 후속조치에 따라 조속히 반납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과장 등 4개 부서장)는

[주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정산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시고, 지도·감독 및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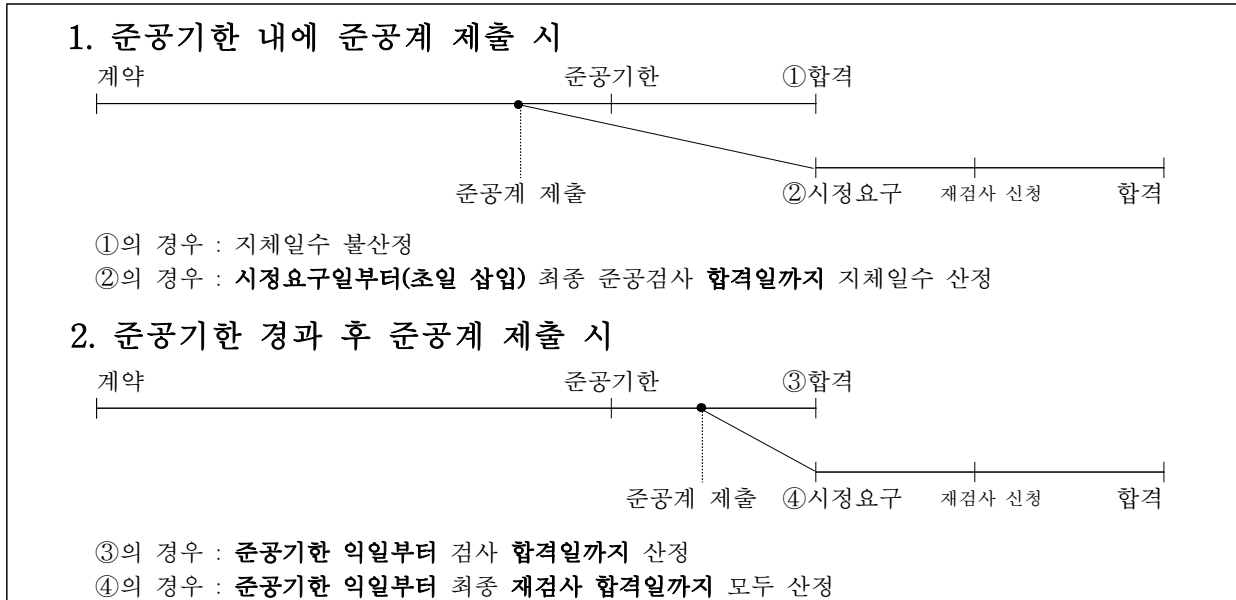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지나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납품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해야 한다.

아울러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므로, 지연배

상금 부과 후 즉시 관련 기관에 수의계약 배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참고 > 지체일수 산정 예시



웅진군의 지연배상금 부과 현황을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지연배상금을 부적정하게 부과 처리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준공기한 경과 후 준공계를 제출한 0건은 준공기한 익일부터 합격일까지 지체일수를 산정하여 하나 그중 0건은 1일 과소 부과하였으며 0건은 1일 과다 부과하였다.

한편, 0건은 준공기한 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필요한 시정요구를 하여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하나 모두 각각 1일 과소 부과하여 처리하였다.

특히 ‘○○○항 정비공사’ 계약 건은 실제 지체일수가 10일이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나, 지연배상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지체일수를 10일 미만으로 처리하여 수의계약 참가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과다·과소 부과한 지연 배상금을 조속히 환급(00천원)·부과(00천원)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특정제품 구매·제조 수의계약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등 5개 부서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 특수한 기술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외에는 사업부서가 특정제품 규격 등을 설계도서에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수의계약 대상자를 정하고 있으며 이중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을 31개로 한정하고 있다.

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³³⁾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33)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품의 설치 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

그리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조달청 고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 1회 납품요구 대상 구매 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물품인 경우 1억원 이상 일 경우 2단계 경쟁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가격 제안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1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 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 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웅진군에서는 우수조달제품,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
-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 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⑧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우수조달제품 선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설계서 등에 특정모델 등을 지정하여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제품이 명시되지 않은 표준시방서로 설계한 후 발주 검토 시 계약 방법으로 우수조달제품으로 구매 결정 한 후 수의계약을 요청 하여야 하나 사업부서에서는 설계용역에 특정 제품이 반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용역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우수조달제품 제품을 보유한 업체의 1견적서 (물품식별번호 표시)만으로 구매를 요청하였으며 성능,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검토, 타제품 및 유사 제품과의 비교, 일정한 규격 및 내용 등으로 입찰에 따른 제조·구매가 불가능한지, 특정회사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어야 하나 관급자재 구매 계획 및 사업계획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 제품 구매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선정 제품에 대한 별도의 내부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의 ■■■면 실내 ■■■ 신축공사 설계내역서에 따르면 막구조물 제작·설치는 (주)●●의 견적서만 첨부되어 있고 타제품과의 비교·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막구조물 품명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제조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등록된 업체 31~35개(막재료의 차이), 우수조달업체 2개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1회 납품요구 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 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 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웅진군은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우수조달제품을 사유로 조달청에 의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국 제안공고를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했을 경우 물품

구매의 낙찰하한률(88%)를 고려했을 때 최대 12%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면과 ◆◆면 실내 ▨▨ 신축공사 막구조물 구입 관급자재구매 검토서에 따르면 공급 및 하자보수를 위해 수도권 내 업체로 한정하여 우수조달제품 1개 업체와 일반 업체 3개 제품을 비교하였다,

결국 타 우수조달제품에 대한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구입예산이 1억이상이므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과의 ㉠㉠ 공영주차장 ▷▷시스템 관련 구매 품목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확인한 결과 계약 품목 중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된 것은 ㄱ(물품식별번호*****, 금액00천원)뿐이었고 ㄱ, ㄴ, ㄷ, ㄹ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확인한 결과 ㄱ은 5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다른 품목도 다수 공급자계약 물품으로 여러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자재인 ㄱ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확인 결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제조 품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주)●●(물품식별번호*****)뿐이었다.

관급자재 변경 구매 검토보고(◆◆과-*****, 20.*.*)에 따르면 ㄱ은 당초 구조계산을 완료한 제품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동일규격 우수조달 제품 적용 시 원가절감 및 건축물 안정성 확보 가능성을 사유로 우수조달제품으로 변경 구매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과에서는 □□도 무장에 숲길조성사업 ㄴ 구입의 경우 설계용역 결과에 1인 견적서를 첨부하여 설계에 특정모델을 명시하였으며 관급자재 구매 요청 시에도 우수조달제품에 대한 비교검토 없이 특정모델을 명시하여 계약 의뢰하였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확인한 결과 ㄴ은 기타조경시설물(세부품목 *****)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며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등록된 업체는 없으며 제3자 단가 계약 업체이면서 우수조달제품으로 1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우수조달제품 간의 비교·검토 문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과의 ●●운동장 ㅅ 교체공사 관련 ㅅ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제조 물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제품(20개) 및 우수조달제품(11개)가 다수 존재하나 설계용역 결과 1인 견적만 첨부되어 있고 ㅅ 교체공사 계획(○○과-*****,20.*.**)에 따르면 타 지자체 발주현황만 비교되어 있을 뿐 인조잔디 제품에 대한 검토는 없었으며 구입예산 1억원 이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 검토 대상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조·구매에 관한 사항

환■□과에서는 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용진군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캔, 유리병, 종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 품목별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구조물)을 추진하였다.

2019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추진계획(■□과-*****, 19.*.**)에 따르면 농공단지 입주공장 직접 생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6호 나항)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하였고, 2020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추진계획(■□과-*****, 20.*.**)을 수립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위해 2019년 계약업체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2021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추진계획(■□과-*****, 21.*.**)에 따르면 인천시 타 군·구 설치 사례 5개 군·구 비교(여성기업 수의계약 2건, 입찰 1건, 농공단지 입주공장 직접 생산 사유 수의계약 1건)하여 용진군 특색에 맞는 사용적합성, A/S 측면 등을 고려할 때 2020년 기 설치한 디자인 설치 추진을 사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종합쇼핑몰을 통해 “재활용동네마당(클린하우스)”로 확인한 결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품 7개가 등록되어 있고, 타 지자체의 경우 재활용 동네마당 물품·제작으로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입찰참가자격 1.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조립식구조물)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하고 있다.

이런 점 들을 볼 때 웅진군에서는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 사유인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품 7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외에는 특정 제품 규격 등을 설계도서에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다.

웅진군 사업부서에서는 관급자재 구매 시 관급자재 구매 및 선고지 요청 내역 [관급자재 품목과 규격(특정제품 모델 및 규격 명시), 수량, 단가, 금액, 납품기한, 예산과목 명시]과 첨부물로 시행건의문, 관급자재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관급자재 구입 및 선고지 요청을 계약부서에 요청하고 있으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재를 선정하지 않았음에도 설계에 명시하였고 수의계약 요청 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하였다.(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는 경우만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제출하고 있음)

웅진군 계약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요청사유서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물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3자 단가(우수조달 등의 사유)로 계약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한다.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타 제품과의 성능을 비교·분석한 자료 제출 여부, 종합쇼핑몰에 유사물품이 등재(우수제품, 다수공급자 계약 등)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대체·대용품 유무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목적, 용도, 제품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함에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사업부서의 수의계약 요청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일반경쟁 등의 방법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웅진군에서는 특정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제품을 구매, 제작할 경우 심의를 거쳐 선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등 특정제품을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웅진군수는

[주의] 자재선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우수조달 등을 사유로 특정업체 제품을 선정하여 수의계약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계약의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일반경쟁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의뢰하고 특정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선정의 적정성을 심사 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특허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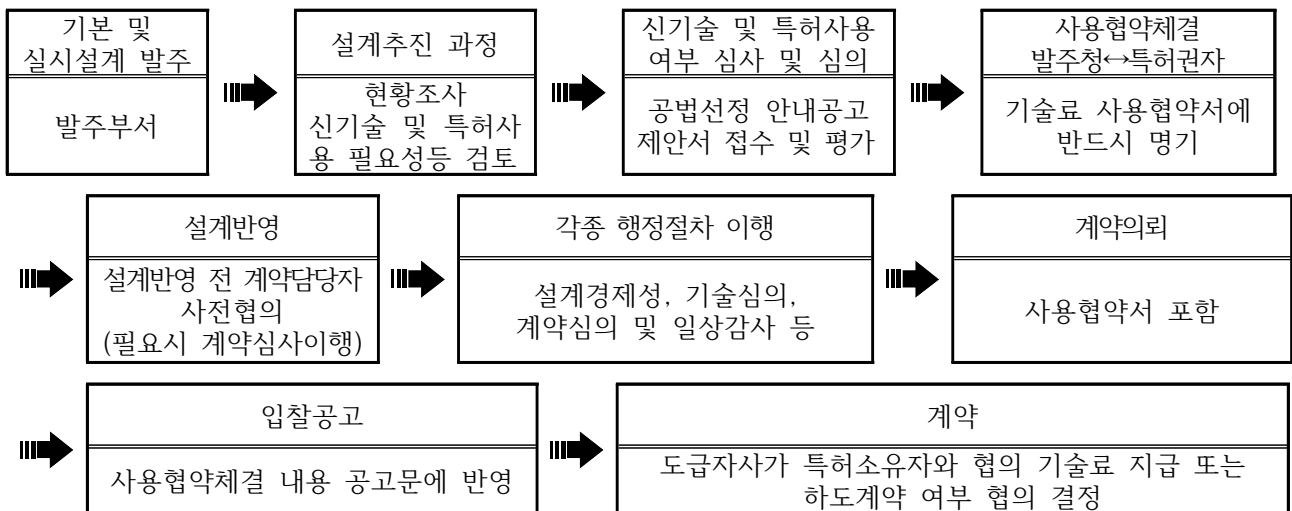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특허공법 기술사용료 미반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특허 통상실시권자 제외)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입찰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의 <참고>와 같다.

【참고】 신기술 및 특허적용 절차



또한 발주 부서는 공사 발주 전에 기술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 사용료나 하도급 범위·하도급 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의뢰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그 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부서는 특허 사용협약 체결 시 기술사용료 등을 정하지 않아 공사 추진 과정에서 기술보유자가 낙찰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등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기술사용료에 따른 비용을 부당하게 낙찰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술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 범위 내에서 기술사용료를 산정 후 원가계산 시 반영하고 공사 추진과정에서 기술보유자의 참여유형에 따라 해당 비용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착공 후 기술보유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보유자의 하도급 계약 신고서가 접수 될 때에는 협약서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감액(기술보유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미지급) 조치하여야 한다.

웅진군에서는 특허공법이 적용된 □□ 공사의 설계내역서에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착공 후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기술사용 협의 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고 낙찰자에게 기술보유자와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2. 특허공법 제안 공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2021.4.1.시행)」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반영하는 신기술·특허공법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1.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당 공법의 신기술 등 적용 필요성 및 평가항목, 평가방법을 검토하여 결과에 반영, 2.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7일(긴급5일)이상 공법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 3.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4. 공법 평가 후 위원별 항목 평가점수 공개 등이다.

용진군에서는 “㉠㉠~㉡㉡ 연도교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 연도교 보도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설계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자재) 선정을 위해 [표2-1, 2]와 같이 제안서 제출 안내공고하였다.

【표2-1】 제안서 참가 자격

<㉠㉠~㉡㉡ 연도교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품 목	구 간	실적기준	비 고
접속교 상부거더	㉠㉠측 L=50m@1 ㉡㉡측 L=42.5m@4	경간장 50m 이상 시공실적 보유	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시공실적 보유
가 설 교 랑	총 L=277m	시공면적 1,000㎡ 이상 실적 보유	
가물막이 가시설	총 3개소	해상공사 실적 보유 (※해상 설치)	

<㉢㉢~㉣㉣ 연도교 보도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품 목	구 간	실적기준	비 고
보도교 상부거더	L=496m, B=1.5m	해안가 실적 보유	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시공실적 보유

※ 자료출처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표2-2】 제안서 1차 선정방법

-제안자가 공법별 10개사 초과인 경우에 우선순위에 따라 공법별 10개사 이하로 평가대상자를 선정(1차 평가)하여 개별 통보
-제안자가 10개사 이하인 경우 제안자 모두 평가대상이며 평가대상자 통보를 별도로 하지 않음
【우 선 순 위】
① 지역업체 우대: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
② 실적우대: 최근 5년간 발주청 시공실적 (공사건수)
③ 신기술 우대 : 신기술 보유사 1개 이상 (단, 신기술 부재시 미포함)
④ 제안가격이 낮은 순으로 최종 선정

※ 자료출처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웅진군에서는 해상 교량의 사유로 제안 참가자격을 실적기준으로 제한 공고 하였으나 기존 공법선정 방법이 설계용역사 제공자료 위주로 검토하여 신규 공법의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통일된 선정 기준 부재에 따른 문제점 발생으로 공법 선정 시 공개 모집을 통해 신규 개발된 공법도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우수한 공법 선정 및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시공에 적용할 기술을 선정하기 위한 제안공고에 참가자격을 공법이나 기술이 아닌 실적으로 제한하는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지방계약법 예규 제4장 제한입찰운영 요령 <별표1>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공사실적으로 제한 할 수 있고, 공사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 할 수 있으며, 기술보유상황과 공사실적을 중복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웅진군 제안공고의 제안자가 공법별로 10개 초과인 경우 [표2-2]의 우선 순위에 따라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공고하였으나 지방계약법예규에 따른 공법 선정 평가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유사한 다수의 신기술·특허공법 중 해당 공사계약 발주 목적에 기여하는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제안된 신기술 등 공법 내용과 무관하게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행정안전부 질의 답변(회계제도과-1498, 21.4.13)]는 의견을 고려해 볼 때 제안서 1차 선정방법에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것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법선정 안내 공고 시 신기술·특허공법의 보유자에게 사업의 규모, 예정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사업 개요를 공지하여야 하고 안내 공고에 [표3]의 사항을 명시해야 하나 예정공사기간, 소요예산,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할 부분 및 추정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3】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안내 공고에 명시할 사항

-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할 부분 및 추정금액
- 2)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3) 공법 제안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 4) 공법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 5) 공법 제안서의 제출기간
- 6) 공법 제안서의 내용
- 7)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8)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자료출처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주의] 특허 등을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제안공고하시고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 보유자와 기술사용료를 반드시 명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등 6개 부서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구매규격 사전 공개와 관련한 이의제기 사항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따르면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계약)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계약에 대하여 발주 전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뢰한 후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의뢰를 해야 하고 계약담당부서는 관련법령에 맞게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계약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옹진군에서는 2019년~2021년 옹진군 ●●●● 및 ○○○○ 용역 등 00건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뢰하지 않았으며 계약담당 부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계약심의대상 안건 제출 요구를 문서로 시행하지 않았다. 결국 계약담당은 계약의뢰 건에 대해 계약심의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수송 민간위탁 용역계약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옹진군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수송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19.*.**)을 수립하여 민간위탁 사무로 처리하고 있고 ■■■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한국환경공단 등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지방계약 실무편람(한국지방재정공제회,2018)의 질의 회신 사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법령에 대행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에 근거하여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보고 있다.

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한국환경공단과는 다르게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폐기물처리업자와 체결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웅진군 ○○과에서는 20**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수송 용역 계약(계약기간 3년, 장기계속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요청하면서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 및 사유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웅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로 하였다.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수의계약 요청서를 검토하여야 하고 지방계약관련 법령에 근거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쟁 입찰을 하여야 하나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결국 법령에 근거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주의] 생활쓰레기 등 수집·운반 및 수송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용진군

관 계 부 서 ○○과 등 10개 부서

내 용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등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소송비용의 확정액은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법」 제165조에 따르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용진군에서는 「용진군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용진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제17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확정 판결 주문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케 된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추심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23조(소송비용 청구)에 따르면 소송 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용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전결대상사무)에 따르면 소송비용 결정 신청 및 회수 업무는 ○○과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진군은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 중 승소가 확정되거나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건에 대하여 자체 없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고 그 결정 금액을 소송 상대방에게 회수하는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번 감사기간(2022.4.18.~2022.4.29.) 중 소송비용을 부담한 이후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취하로 종결된 소송사건에 대해 소송비용 회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00건 중 00건은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였고 0건은 소송비용 청구 진행 중이다.

소송비용 확정결정 00건 중 0건(12%), 00원만 회수가 완료되었고 00건(88%), 00원은 회수되지 않았으나 소송 담당부서에서는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재산명시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대상 기관운영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하여 대행감사 실시를 의뢰(지방행정감사1국제1과-681,21.5.3) 하였고 2021년도 대행감사 실시 지침(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제1과-704, 2021.5.7.)에 따르면 소송비용 확정 결정 미신청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 후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독촉이나 압류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모두 업무 처리 부적정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웅진군 ○○과에서는 대행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소송비용액 확정 미신청 사례가 없다는 사유로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 지적사항 없음으로 처리[2021년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보고(문서번호-****, 21.*.**)]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주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사건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장기간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소송확정 결정을 받고도 회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소송비용 미회수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관경고·주의 요구 및 권고

제 목 민간위탁 사무업무 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실 등 8개 부서

내 용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며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하고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 기관으로 선정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하며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 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웅진군은 웅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 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웅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정 정비 및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해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제도과-2955, 20.9.16)을 배포하여 민간위탁 업무추진 절차(단계)별로 필요사항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여건 등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선별적으로 적용 및 확대 적용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하거나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담당 부서를 사업부서라 하며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관련 지침 등을 제·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제도 운영부서를 민간위탁 총괄부서라 하며 업무 추진 단계별 절차는 <참고>와 같다.

웅진군은 민간위탁 사무 총괄을 ○○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사무 관련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령과 웅진군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2022.4.18.~2022.4.29.) 동안

00개의 용진군의 민간위탁 사무를 확인하였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소홀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시 용역, 사용수익허가, 대행, 보조사업, 등의 유사개념 사무와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사업 수행의 권한 및 책임 소재, 법률효과 등 민간위탁의 법적 성격에 맞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간위탁과 유사개념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잘못 판단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수송’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아님에도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하였다.

2. 위·수탁 협약서 체결 부적정

용진군 사업부서에서는 민간위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과 용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표준협약서(안)를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해야 하나 협약서에 위탁기관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법무담당부서의 적법성 심사를 거쳐야 하나 적법성 심사 없이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체결된 협약서 사본 또한 총괄부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혼용된 경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민간위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무위탁이 수반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이 상호 모순 및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면서 민간위탁 사무인 ○○○○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유재산(○○모텔, 다가구주택, 사무실) 시설물·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과 □□재배사 시설물·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은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협약서가 체결되었다.

3. 민간위탁 사후관리

웅진군 사업부서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 및 책임을 확인하여야 하나 사무편람 미작성(군청 승인 후 비치), 화재보험, 손해보험 등의 가입 여부 미확인,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지도·점검 실시하여 협약 내용의 이행 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 실태,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위탁사무 처리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웅진군 조례에 따른 기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나 미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유재산(○○모텔, 다가구 주택, 사무실)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재배사 시설물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수탁자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로 보고 위·수탁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수탁자는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를 결정하였을 경우 웅진군의 승인을 득한 후 징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수탁기관이 일부 수익재산에 대해 전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위·수탁계약 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전대사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심사(수탁자가 관리위탁 받은 재산 중 일부를 제3자에게 관리를 재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계약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하고,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웅진군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관리위탁 조건에 반하는지 심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용료에 대한 승인도 하지 않았다. 결국 수탁자는 위탁자인 웅진군의 심사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였고 사용료 승인 없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웅진군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에서는 민간위탁 관련 법규 및 웅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다.

【참고】 민간위탁 업무 추진 절차

절차		담당부서	민간위탁
①	사전적정성 검토	사업부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운영사례 등 사전조사
②	추진계획 수립	사업부서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사무의 구체적 범위 및 내용, 위탁기간, 추진일정, 수탁기관의 적정한 기구 및 인력 검토, 위탁비용 산정, 수탁기관 선정방법 결정 등
③	민간위탁 수행사무 적정성 심의	사업부서 총괄부서	기본조례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 권장
④	의회동의	사업부서	지방의회 동의
⑤	예산편성	사업부서	민간위탁예산은 원칙적으로 민간위탁금(307-05)으로 편성·운영
⑥	수탁기관 선정	사업부서	(선정기준)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고려 (선정방법) 공개모집 원칙 및 예외적으로 수의협약 (공개모집) 공고-제안서 접수-수탁기관 선정(적격자 심사위원회 등 심의)-협약체결 (수의협약) 수의협약 사유 등에 대한 심의
⑦	위수탁 협약체결	사업부서	(협약서 포함 사항) 위탁 목적, 수탁기관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시설 및 장비 내역, 위탁에 따른 비용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위탁사무 및 그 내용, 시설의 안전

절차		담당부서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협약위반 시 의무 이행, 협약의 해지, 손해 배상 등 책임 사항,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수탁기관 사업계획 작성 → 위탁기관 검토 및 승인 (행정재산의 수리보수)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여야 함에도 수리 비용을 수탁기관에 부담 시키는 일부 사례 발생, 법 규정 준수 요망
⑦-1	협약서 체결절차	총괄부서 사업부서 법무부서	표준협약서(안) 마련(민간위탁 총괄부서) → 사업부서에서 표준협약서(안)을 위탁 사무의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수탁기관에 협약서(안)제시 및 협상 →협약서(안) 마련→협약서(안)에 대한 적정성 심사(법무담당부서)→협약 체결→협약서 사본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제출
⑧	사무편람 승인	사업부서	수탁기관이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검토하여 승인
⑨	사후관리	사업부서 총괄부서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제3자 재위탁)금지 (유사개념)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수탁기관)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
⑩	성과평가	사업부서	(목적) 위탁사무별 핵심가치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업무 집중도 제고 도모 (지표) 위·수탁 협약시(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평가지표 제시(사업부서) 후 협의(사업부서·수탁기관)를 통해 사전 지표 확정 (시기)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 만료 90일전 까지 평가 완료 (방법) 민간위탁 총괄 부서 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위탁
⑪	재위탁 재계약추진	사업부서	(재위탁)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재계약)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추진절차) 신규위탁의 절차와 동일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기관경고] 민간위탁 사무업무 처리에 소홀함이 있어 기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바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후관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민간위탁 사무업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무업무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선 요구

제 목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목적)에 따르면 옹진군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을 인용하고 있고,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와 관련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을 인용하고 있다.

조례 제6조(위원회 설치) 제1항 및 제7조(위원회 기능) 제1항에 따르면 옹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각각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및 제32조의3제3항을 인용하고 있으며, 조례 제7조(위원회 기능)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인용하고 있다.

또한 조례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지원 제외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을 인용하고 있으며, 조례 제25조(성과평가)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을 인용하고 있고, 조례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1항을,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을 인용하고 있다.

한편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정, 2021. 7. 1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관리와 관련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 규정은 「지방재정법」 개정(2021. 1. 12. 개정, 2021. 7. 13. 시행)에 따라 삭제되었고, 「지방자치법」도 전부개정(2021. 1. 12. 전부 개정, 2022. 1. 13. 시행) 시 기존의 조항들을 재정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1. 7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참고 자치법규안을 송부¹⁾하였고,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해당 문서를 각 군·구로 송부²⁾하였으며, 옹진군 ○○실에서는 같은 문서를 2021. *. **. 접수³⁾하였다.

그럼에도 옹진군 ○○실에서는 감사일 현재(2022. 4월)까지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지방재정법」 개정 전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한 사항의 조례 상 인용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前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2조⁴⁾의 사항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이후에는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례의 인용 규정을 개정하지 않음으로 지방보조금 업무 추진 시 관련 조례의 인용에 있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개선]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자치법규안 등을 참고하여 조속히 개정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 재정협력과-2639(2021.7.27.)호,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참고 자치법규안(前 표준조례안) 송부

2) 예산담당관-8992(2021.7.28.)호,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참고 자치법규안(前 표준조례안) 송부

3) 기획조정실-7938(2021.7.28.)호

4) 2021.1.12. 전부개정 전 조제목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2021.1.12. 전부개정 후 조제목 :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인 천 광 역 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실 등 5개 부서

내 용

1.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항목별 배점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따르면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 능력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4. 제안서의 평가에 따르면 평가항목과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고,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로 정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등을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에 따른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한도는 [표1]과 같다.

【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u>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u>
	정성적 평가분야 ·용역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 발췌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있어서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웅진군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9. 4월 이후, 이하 같다) 중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0건에 있어서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가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의 30%를 초과하여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별 배점이 부적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 없이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였다.

2. 제안서 평가위원 인원 수 미충족 및 관련 규정 개정 미추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웅진군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0건에 있어서 평가위원 수가 7인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예비 평가위원 추가 연락 및 위원회 일정 변경 등 평가위원 최소인원 수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없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평가위원 최소인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 9. 13.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주의사항 통보” 문서를 발송하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내부규정 등으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선정된 위원 중 2/3 이상 위원만 출석한 경우 위원수에 관계없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평가위원이 7인 미만인 경우에도 제안서를 평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달리 평가위원 최소인원수 미만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과, 내부규정으로 평가위원 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하였고, 인천광역시에서는 2021. 9. 23. 같은 사항을 관할 군·구로 발송하였으며, 웅진군 ○○과 용역계약 담당자는 2021. *. **. 해당 문서를 접수하였다.

「웅진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살펴보면,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웅진군 ○○과 용역계약 담당자는 감사대상기간 중 0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평가위원 최소인원 수 미충족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2022. 4월)까지도 해당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행정안전부의 주의사항 관련 문서를 접수하였음에도 이를 공람 조

치 및 새로운 문서 시행 등을 통해 기관 내 부서 등에 알리지 않았고, 내부규정인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제안서평가위원회 적정 운영을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 평가결과와 공개에 따르면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도록 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웅진군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계약에 있어서 입찰이 성립한 0건의 제안서 평가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현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개하였다.

그러나 ‘2020년 ■■ ◇◇◇ 소식지 제작’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하는 사항과는 다르게 입찰가격점수와 기술평가점수, 종합평점만을 공개하고,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주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 기준 준수 및 최소 평가위원수 충족,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로 적정하고 신뢰성 있는 제안서 평가가 실시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 최소인원수를 미충족한 상태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도록 「용진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LED전광판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옹진군 ○○과에서는 2020년 해수욕장(◆◆◆, ●●●) 일원 및 인천항□□□□ 일원에 LED전광판 제작·설치사업을 추진하였다.

1.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가. 수의계약 검토 사항의 객관성 결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제7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6호 라목 6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 따르면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웅진군 ○○과에서는 2020. *. *. ‘옥외 LED전광판 제작 및 설치’ 계약 관련 문서를 □□과로 발송하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사유로 1인견적 수의계약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과의 요청에 따라 □□과에서 2020. *월에 계약 체결한 ‘▷▷면 해수욕장(◆◆◆, ●●●) 관광안내 LED전광판 제작 및 설치’사업은 [우수조달 물품(전광판) 지정증서를 소지한 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입찰을 실시하여 선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물품(안내전광판)의 제작·설치에 있어서 1인견적 수의계약 요청 사유(우수조달물품 지정)에 해당하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사실상 경쟁 성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지명입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전광판의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이 존재하는 등 특별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수의계약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한 지명입찰 등을 실시하여 계약 체결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웅진군 ○○과에서는 ‘옥외 LED전광판 제작 및 설치’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2020. *. **, 기준 우수조달물품 지정 업체가 다수(00개 업체) 존재함에도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보유 등을 비교 기준으로 하여 0개 업체의 전광판만을 비교하여 ‘화질’이 우수하며 ‘유지보수비’가 타사보다 저렴하고 ‘AS’가 우수하다는 점을 이유로 ‘주식회사 ㉠㉠’을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여 □□과로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수의계약 요청 업체 선정 사유인 ‘화질’은 비교대상 업체 모두 각각 장점이 존재하는 사항이고, ‘유지보수비’와 ‘AS’는 출장을 통해 조건(규격 및 업체와 설치 위치 사이의 거리 등)이 동일하지 않은 상태의 타 자치단체 안내 전광판 설치사항을 비교한 것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검토 자료로는 객관성이 다소 결여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 성립이 가능한 계약을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요청함으로써 계약체결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

나. 특정제품 지정사항을 명시한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 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 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를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웅진군 ○○과에서는 ‘옥외 LED전광판 제작 및 설치’ 계약에 있어서 시방서에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를 명시하여 □□과로 수의계약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해당 물품의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를 지방서에 명시한 사항은 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 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었음에 따라 이를 접수한 □□과에서는 먼저 동일 조건에서의 경쟁 성립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계약 방식 결정하여야 했고, 수의계약이 타당하였을 경우에도 수의계약 요청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표준지방서 명시 등의 보완 요구를 통해 적정한 수의계약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했어야 함에도 ○○과에서의 수의계약 요청사항을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1인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였고 지방계약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다.

2. 부속적 성격의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포함 부적정

지방계약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1인견적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품의 설치 등에 수반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용진군 ○○과에서는 ‘옥외 LED전광판 제작 및 설치’ 사업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안내전광판) 지정 사유로 1인견적 수의계약을 요청하며 설계서 상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전광판 설치에 부속되는 성격⁵⁾의 제품인 CCTV를 포함하였다. 또한 수의계약 요청을 받은 재무과에서는 해당 설계내역 등을 검토하여 수

5) 전광판 표출 내용 상시 모니터링 목적

의계약 체결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부속적 성격의 제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분리 등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관광문화진흥과에서 제출한 내역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계약예규의 수의계약 체결 관련 주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설치안내 미실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등 각 호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1항 각 호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 호로 정하고 있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웅진군 ○○과에서는 ‘옥외 LED전광판 제작 및 설치’ 사업에 있어서 전광판 표출사항 감시용 CCTV를 인천항□□□□□□□ 옥상과 계근소 부근의 0곳에

설치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안내판 설치 또는 그에 갈음한 용진군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주의] ① 계약체결 방법 결정 시 경쟁 성립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무분별한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로 인한 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적용하시어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실 등 12개 부서

내 용

1. 정기하자검사 실시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1항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서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각 호로 정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70조(하자 검사)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에 따르면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되,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웅진군 □□과에서는 공사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고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도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감사대상기간(2019. 4월 이후, 이하 같다) 중 매년 상·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를 해당부서로 요청(독촉 포함)하였고, 2020년부터는 매월 하자검사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실 외 10개 부서에서는 요청받은 하자검사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및 결과 제출을 소홀히 하였고, □□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하자검사 실시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입력, 관리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여부가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감사대상기간 00건의 하자검사 대상 중 00건의 하자검사가 미실시 되었다.

2. 공사계약 최종(완료)검사 실시 미흡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서는 시행령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의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각 호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 목적물의 하자 3. 하자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최종검사는 계약목적물에 발생한 하자 보수에 대한 부담 관계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를 소홀히 하여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 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수 부담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에 해당한다.

웅진군 □□과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사업부서에 상·하반기 정기하자검사 실시 요구 시 매월 최종검사가 도래한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 통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실 외 8개 부서에서는 최종검사를 미실시하거나 실시결과를 □□과로 정확하게 통보하지 않았고, □□과에서는 사업부서의 결과 통보 여부를 확인하고 정리하여 미실시 건에 대하여 적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감사일 현재(2022. 4월) 담보책임기간의 만료가 도래한 00건의 공사계약 중 00건에 대한 최종검사가 미실시 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주의]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물품 및 용역 계약에 대한 연 2회 이상의 정기하자검사 실시와 공사계약에 대한 최종(만료) 검사 실시 및 실시현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어 담보책임기간 내 계약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정기하자검사 및 최종(만료)검사 소홀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재무과에서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자검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시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도 연도교 해수 소통로 건설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사업개요

옹진군(○○과)은 2019년 **월 ■■(주)과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월 준공을 예정으로 “●●도 연도교 해수 소통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련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 등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설계변경 관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지적사항

가. 물막이 차수벽 자재 시트 파일 소운반 설계변경 소홀

●●도 연도교 해수 소통로 건설사업 설계도서에는 교각(P1~P9) 기초 콘크리트 타설 등을 위한 가시설 물막이 차수벽 시공 자재 시트 파일(강널말뚝) 00ton(사용기간 손료 6개월)을 적치장에서 현장으로의 소운반 공중에 대하여 1ton당 00천 원이 계상 되어 있으며,

교각(P1~P9) 가시설 물막이 순차적 시공으로 인하여, 반입된 자재중 일부 시트 파일 자재를 재 사용함에 따라, 소운반 물량이 00ton으로 당초 설계보다 00ton 감소하였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하도록 검토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 없이 시공함으로써 개략 00천 원(제경비 포함)이 설계변경(감액)에서 누락된 사실이 있다.

나. 교각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목재 → 강재) 설계변경 소홀

●●도 연도교 해수 소통로 건설사업 설계도서에는 교각(P1~P9) 콘크리트 타설 등을 위한 가시설 거푸집이 원형(목재)로 계상되어 있으나, 목재 거푸집은 제작 및 시공 단가가 강재 종류 보다 비싸고, 당해 현장이 해상인 관계로 목재 사용 시 해수 접촉에 뒤틀림 현상 등이 발생하여 강재 거푸집으로 변경 시공하고자 시공사와 협의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히 높은

자재로 변경을 공사 감독자에게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 보고 없이 시공함으로써 개략 00천 원(제경비 포함)이 감액 설계변경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시정] ① 시모도 연도교 해수 소통로 건설사업에서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는 시트파일 소운반 및 가시설(목재 거푸집) 공종에 대해 00천 원을 감액 설계변경 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소하천 정비 공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사업 개요

옹진군(○○과)는 관내 00개소(L=65.53km)에 대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2. 관련 법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목적은 소하천 관리, 이용, 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있게 조사·분석하여 소하천사업에 대한 적정 투자규모와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향후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하는데 있으며,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은 소하천 등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적 사항

가. 소하천 정비 종합 및 중기계획수립 관련

옹진군(○○과)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소하천 정비계획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재원조달 및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투자 계획을 근해도서와 서해5도서 소하천으로 분리하여 각각 수립하였다.

그러나, 옹진군은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근해도서와 서해5도에 대해 균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서해 5도에 소하천 정비 사업을 편중하

는 등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과 정비 투자 우선 순위에 맞지 않게 추진하여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소하천 정비법」 제26조에 따라 소하천정비 중기계획과 소하천(소하천 시설을 포함)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군에 설치된 기초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웅진군 ○○과에서는 2020년 ■■■면 ◆◆◆천과 ●●천은 우선순위 변경(상향) 등 소하천 정비 목표 및 기본 방향 수정에 따른 소하천정비 중기 계획 변경과 웅진군 기초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인천시 □□과에 제출하였다.

나. 인·허가의제 등 완료고시 이행 소홀

「소하천 정비법」 제8조에 따라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이 때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의제 받을 인가·허가 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하천정비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에 따라 의제 되는 인·허가 등에 준공검사·준공인가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웅진군 ○○과는 ■■■면 ■■■천 정비공사 등 0건에 대하여 준공 시 준공 검사·준공인가 완료 고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공공시설물(소하천) 준공에 따른 지목 변경 소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0조(합병 신청) 제1항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81조(지목 변경 신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진군(건설과)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준공한 소하천 정비 0건 ***필지 00m²(약00천평)에 대하여 지적공부정리(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을 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원래의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관리되고 있어 각종 인·허가 행정업무에 혼란을 야기하고, 공유재산 관리에서 지목별 공시 지가 차이로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시정] 관련 법률에 따른 심의 및 인·허가 등 소홀한 행정절차를 조속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소하천 정비를 위한 종합 및 중기계획 수립 시 소하천 관리, 이용 등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적정 투자 규모와 투자 우선 순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농어촌 도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관련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생산·유통 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같은 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및 제6조(도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군수는 시도 및 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로기본계획에는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어촌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정비계획·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적사항

가. 도로 굴착 2차 복구 소홀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르면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웅진군(○○과)에서는 2019년 인천시◆◆의 웅진군 7개 면 도로 굴착에 따른 2차 복구 비용으로 00억 원을 징수하여 개략 00억 원 만 2차 복구를 추진하고 나머지 00억 원에 대하여는 2022년 하반기 부터 연차적으로 복구(노면 포장)를 계획하고 있어 감사일 현재 2차 복구 지연에 따른 도로 노면의 골재 분리 현상 등에 의한 요철이 발생하여 주민 및 관광객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나. 도로 공사 행정절차 소홀에 따른 착공 지연

웅진군(○○과)에서는 도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따라 수립한 노선별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웅진군의 도로 확·포장을 통한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향상을 위해 원활한 보상 추진은 물론 사업 착공을 위하여 힘써야 하나, 2019년 실시설계 용역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도로 공사 착공이 지연 되는 등 주민들의 교통 편익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 공사 착공이 지연 되는 사유로 토지 소유자가 보상 협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로 조기 착공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웅진군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으로 재결 결과에서 결정된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강제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웅진군(○○과)에서는 군도 **호선 등 0건은 2019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토지소유자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등을 하지 않고 보상 열람공고 및 손실 보상 협의 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도로 ***호선 등 0건은 도로 노선 선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수립 함에 따라 다시 노선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재 청취 하는 등 행정절차 추진 소홀로 인하여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다. 공공시설(도로) 준공에 따른 지목 변경 및 합병 신청 소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0조(합병 신청) 제1항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81조(지목 변경 신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진군 ○○과에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공부 정리 신청서(지목 변경, 합병)와 도로의 준공조서, 편입 용지조서 및 등기합병신청에 필요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진군에서는 2019년~2021년까지 준공한 농어촌도로사업 0건 00필지 00㎡(00평)에 대하여 지적공부정리(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을 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사업 착공 전인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관리되고 있어 각종 인·허가 시행업무에 혼란을 야기하고, 공유재산 관리에서 지목별 공시지가 차이로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 [시정] ① 주민 및 관광객 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도로 굴착 2차 복구를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라며,
- ② 도로 공사 행정절차 소홀에 따른 착공 지연 및 공공시설(도로) 준공에 따른 지목 변경 등을 조속히 선행 처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환경분야 보조사업 행정절차 이행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신고) 절차 이행 소홀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르면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정한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하며, 제2호에 정한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및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설계도서, 처분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등 각 호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진군 ○○과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표]와 같이 설치하고 준공 하였다.

【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현황

사 업 명	소재지	처리능력 (규모)	사업비(백만원)				착공일자	준공일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계	국	시	군			
●● 소형소각시설 설치	◆◆면 ●●리 ***-*	100kg/시	940	564	188	188	2019.**.**.	2020.**.**.	2020.**.**.
■ ■ 매립시설 설치	■ ■ 면 ■ ■ 리 ***-**	1,958m ³	922	554	184	184	2019.**.**.	2021.**.**.	202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대상사업(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 관리형 매립시설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진군 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대상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설치 승인(신고) 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연 제출함으로서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적게는 7개월에서 많게는 11개월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을 시행하여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2.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절차 이행 소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라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⁶⁾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따르면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웅진군 ○○과에서 시행한 “■ ■ 매립시설 설치” 사업은 2019. **. **. 착공하여 2021. *. **. 준공하였으며, 당해 시설은 관리형 매립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여 국토계획법 제2조에 정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라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관리형 매립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인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웅진군 ○○과는 도시·군관리계획 대상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시행 전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작성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착공하였고, 이후 11개월이 지난 후에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이행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6)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호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와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환경부)」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지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 및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같은 지침 제15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제1항과 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 담당부서장은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제5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따라서 용진군 ○○과는 환경분야 보조사업을 공모 형식을 통해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용진군 ○○과는 ●●●사업장 방지시설과 ●●●●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 형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 추진 및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주의] ①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사업의 시행 시 착공 전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승인(신고)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② ●●●사업장 방지시설과 ●●●●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조사업의 간접 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옹진군 ○○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폐기물법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등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62조(벌칙)에 따르면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63조(벌칙)에 따라 제13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웅진군 ○○과는 2020. 8.~9. ◆◆(주) 등 0개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쌓아 놓고 있다는 민원신고와 언론보도를 접수하여 현장확인 후 “건설폐기물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덮개 설치 및 폐기물을 반출처리할 것”을 조치명령하고 이에 불응한 사업자를 인천□□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그런데 상기 위반 사업장들은 모두 당해 현장에서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한 배출자 신고를 득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아 부지 내 방치된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건설폐기물은 자체 발생시킬 수 없고 외부에서 반입하였음을 현장 확인 당시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웅진군 ○○과는 건설폐기물 덮개 설치와 반출 처리할 것을 조치명령하였을 뿐 건설폐기물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확인 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처분 이행에 미흡한 사실이 있다.

또한 ◆◆(주) 등 0개 사업장의 폐콘크리트 등 무단 방치된 건설폐기물 약 00톤에 대하여 2021. *. **.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 2022. 4.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폐기물에 대한 조치이행 여부 확인 및 처리 명령, 무허가 영업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 더욱이 위 사건으로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처리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보고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행정처분하는 등 적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업장의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히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옹진군 ○○과는 운영 중인 0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 및 시설에 대한 시설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진단을 시행하였다.

1. 기술진단 결과 이행사항 조치 소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m³이상인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기술진단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10조(개선계획의 수립·보고)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1조(개선 이행 및 확인·점검)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개선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옹진군 ○○과는 「하수도법」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주)◆◆ 등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진단비용 00천 원을 지불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기술진단 보고서에 개선이 필요한 이행사항

및 비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용진군 ○○과는 기술진단 결과 개선 이행사항 00건에 대하여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0개 하수처리시설의 0개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 미조치하는 등 용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사항 및 문제점 해소를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기술진단 개선공사 사후 정산 미이행

용진군 ○○과는 2021년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개선공사를 시행하였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 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및 제18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 정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납입 확인서 중 사업주 부담금액에 대하여 정산하되,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상용 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용진군 ○○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공사 2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준공정산 시 상용근로자에 대한 직접노무비 대상여부,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함에도, 증빙서류에 대한 준공정산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공사에 00천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공사에 00천원의 국민건강 보험료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시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미이행에 따라 과다 지급된 00천원을 환수하기 바라며, 향후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기술진단 결과에서 제시한 개선 이행사항에 대하여 시기와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주의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옹진군 ○○과는 「하수도법」 등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등에 대한 지도·점검, 행정처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소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조(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제2항 및 제23조(점검결과 등의 보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지도·점검 방침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결과 등을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5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분류) 제1항 및 제19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점검기관은 지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⁷⁾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기 지도·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표]와 같은 정기 지도·점검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7) 지도·점검 사업장의 등급 구분

- 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 중점관리 :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등 별표4로 정하는 사업장 및 시설

【표】 개인하수처리시설 정기 지도·점검 기준

(단위 : 회/년)

지 역			수변·특정 지역	기타지역
등 급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대상 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2m³/일 초과. 단, 수변·특대지역은 1m³/일 이상 등)	우수관리	1. 처리용량 50m³/일 이상	2	1
		2. 처리용량 50m³/일 미만	1	1
	일반관리	1. 처리용량 50m³/일 이상	2	2
		2. 처리용량 50m³/일 미만	1	1
	중점관리	1. 처리용량 50m³/일 이상	4	2
		2. 처리용량 50m³/일 미만	2	2

※ 자료출처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수립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도·점검 대상 전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 운영·관리 현황을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진군 ○○과는 매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계획”수립 시 지도·점검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지도·점검 대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계획횟수 대비 2019년 00회, 2020년 00회, 2021년 00회 지도·점검을 미 실시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기준 준수여부 등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행정처분 부적정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 수질기준) 및 제80조(과태료)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방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에 따르면 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개선완료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용진군 ○○과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의 이행상태 확인과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등 개선 이행완료의 확인절차를 이행 하여야 했다.

그러나 용진군에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0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 00천원의 부과만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개선명령 행정처분과 이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 등 관련법 위반 사업장의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시정]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을 관리 등급별로 분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하수도법을 위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적정한 행정처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하수도법 위반 행정처분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징 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건설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 관련 감사처분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옹진군(당시 ●●과, ◆◆과)에서는 2016. *. **.부터 2016. **. **.까지 「●●면 청사 신축공사」를 시행하였고, 2016. *. **.부터 2016. **. **.까지 「●●면 ●●2리 마을경관 개선사업」, 2016. *. **.부터 2017. *. **.까지 「ⓂⓂ ⓄⓄ수련원 신축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의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파쇄기)을 설치하고 순환골재를 생산하여 옹진군 발주공사의 자재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제1항에는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옹진군은 ●●면 청사 신축공사 등 3개 공사현장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파쇄 후 ‘발생하는 순환골재는 당해 현장에 한해 재활용’이라는 조건으로 옹진군 ◆◆과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각 현장에서 발생한 순환골재를 도서지역임을 감안하여 다른 인근 공사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환경부에 ‘순환골재 관련 질의’[옹진군 ◆◆과-*****(2017.**,**.)]를 하여 ‘순환골재 관련 질의 회신’[환경부 폐자원관리과-*****(2017.**,**.)]을 통해 “건

설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건설현장에 필요한 골재의 소요량만 중간처리하고 잔여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용진군에서는 ‘●●면 청사 신축공사’ 시 당해 건설현장에는 재활용 골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이 없는 ‘●●면 □□□□탑 조성공사’에 00톤과 ‘㉠㉠3리 ▷▷▷회관 신축공사’에 00톤을 사용하였으며, ‘●●면 ●●2리 마을경관 개선사업’ 시 중간처리(파쇄)한 순환골재 00톤 중 당해 건설현장에 00톤만을 사용하였고, ‘㉠㉠ ◎◎수련원 신축공사’에는 순환골재 00톤 중 당해 건설현장에 00톤만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파쇄 및 재활용 후 잔여 폐기물 약 00톤(백령면 00톤, 연평면 00톤)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위탁처리하지 아니하고 ‘●●면 □□리 ****번지(군유지, 10,261.4㎡)’과 ‘㉠㉠면 ****-****번지(군유지, 49,196㎡)’에 야적하여 2019년 용진군 종합감사일까지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어,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에 징계(경징계 1명) 및 주의(훈계 5명) 등의 처분을 받았고, 용진군은 방치된 폐기물 전량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위탁처리” 하도록 시정 처분의 감사결과를 인천광역시로부터 통보받았다.

따라서 용진군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종합감사 당시 ●●면과 ㉠㉠면에 야적되어 있던 건설폐기물 약 00톤에 대하여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면에 야적하였던 건설폐기물 00톤에 대하여는 2020년 ▲▲공사에서 시행한 “㉠㉠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과 용진군 시행 “㉠㉠ 공공임대주택 주변 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처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면 □□리 ****번지에 야적하였던 건설폐기물 00톤에 대하여는 2022. 4월 감사일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산 또한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건설폐기물 처리 행정절차 이행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여 폐기물을 외부로 전혀 반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용진군은 감사처분 이행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방침 수립을 감사기간 중인 2022. 4. 22. 완료하였고, 2022년 후속 예산 편성 시 처리 예산을 반영하여 조속히 ‘시정’ 사항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시정] 현재 ○○면 □□리에 방치된 폐기물 00톤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훈계] 관련자 중 C, D, E, F를 경징계 처분하시고, A, B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건축 설계공모 관련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⁸⁾은 건축서비스산업⁹⁾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¹⁰⁾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¹¹⁾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등을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정해야 하는 건축물등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옹진군(○○과)의 2019년~감사일 현재까지 ○○면 주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0개를 설계공모하였다.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9)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함

(건축서비스*: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함)

10) 건축물과 공간환경(건축서비스법 제2조제1항제1호)

11)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함

1. 설계공모 시행 소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¹²⁾(이하 “중전지침”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의 명단을 중전지침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발주기관등¹³⁾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용진군(○○과)에서는 감사기간 총 0건 의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모 참가자에게는 ‘사전접촉 금지서약서’를 제출받았으나 심사위원에게는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고,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설계자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라는 개정취지¹⁴⁾를 소홀히 하여 설계공모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2.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진행 및 결과 공개 미흡

한편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품질로 경쟁하는 설계공모 제도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 등 공모절차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¹⁵⁾(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개정·고시하였다.

개정된 지침 제13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등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

12) [시행 2019. 4.30.][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

13)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14) [시행 2017. 9. 1.][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24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이유

15) [시행 2021. 8.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2호]

정보처리 시스템(이하 “세움터”라고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웅진군(○○과)에서는 지침이 개정 후에도 심사위원회의 진행을 비공개로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를 세움터에 공개하지 않고 웅진군누리집 등을 통해서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지침 제20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일반설계공모 및 제안공모의 평가에서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웅진군(○○과)에서는 단순히 평가점수 고득점으로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웅진군수는

[주의]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 직원 업무 연찬을 하여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과, ◇◇관

내 용

옹진군(○○과)은 공공하수시설 정밀안전점검 업무를 옹진군(□□과)은 용역 계약업무를 옹진군(◇◇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시특법 대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관리주체¹⁶⁾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정기점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A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에서 E등급(즉각 사용금지)까지 그 시설물의 안전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28조(시설물의 성능평가)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등의 실시시기는 [표]와 같다.

【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16)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함.

1. 정밀안전점검 용역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제2절 “1”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고 되어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

웅진군(○○과)에서는 2021. *. **. ~ *. **.에 「◆◆ 및 ●●공공하수처리 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17)(이하 ‘정밀안전점검용역’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 및 ●●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과업지시서(이하 “과업지시서”라 한다)」 3. 일반지침“자”에서 본 과업의 수행기간 중 내용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에 대하여는 ‘을18)’의 책임하에 보완조치 하여야 하며,

“차”에서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문서의 내용에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을’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문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 된 경우에도 ‘을’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과업지시서 4. 과업수행 “가”에서 과업의 수행 2) 정밀점검에서 육안점검, 반발경도시험을 통한 비파괴강도(필수항목), 탄산화 깊이 측정(필수항목), 가스누출 조사(필수 항목)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7. 기타사항 “가”에서 본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결함부, 육안점검 전경 및 비파괴강도(기록지 및 현상지 등)의 시설 전반에 관하여 촬영한 후, 사진첩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과업지시서 8. “가” 성과품의 작성 2)에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17) 공공하수처리시설 2곳을 하나의 용역으로 수행

18) 과업계약자(과업지시서 3. 일반지침 가.)

과업종료 7일전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웅진군(○○과)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업지시서에 따른 과업수행 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및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하는 등 정밀안전점검용역에 대한 감독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웅진군(○○과)에서 정밀안전점검용역의 필수과업으로 정한 ‘가스누출 조사’를 용역사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웅진군(○○과)은 이에 대해 결과보고서에 포함토록 지적·수정토록 하지 않는 등 정밀안전점검용역의 결과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준공한 사실이 있다.

2. 3종 시설물 지정 및 실태조사 소홀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제1항 및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안전상태, 공중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 시설물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실태조사)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 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물¹⁹⁾에 대하여 시설물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이거나 실태 조사를 하지 않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려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웅진군(◇◇관)은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물에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웅진군(◇◇관)은 매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19)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3종 시설물의 범위: 예)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공동주택 및 연면적 1,000㎡ 이상 5㎡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등

하였으나 이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이외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면 ○○리 ○○모텔 등 10개의 민간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용진군 청사의 경우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시정] ① 용진군 청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후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③ 정밀안전점검용역 관련 용역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징계·시정 요구

제 목 노외주차장 설치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면

내 용

옹진군에서는 관내 □□면 ■■리 ▷▷▷신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 시설 확충을 위한 ‘▷▷▷신항 공영주차장’을 2022. *. **.에 준공하였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조립식 주차장(공작물)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²⁰⁾에 해당한다.

1. 추락방지시설 설치 부적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군수 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같은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²¹⁾」 제4조에 따르면 추락방지시설은 주차공간 및 경사로의 외벽면 등 차량의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지침 제10조(기타안전시설²²⁾)에서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추락방지시설로 해당 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기둥 정착형, 보 정착형, 독립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추락방지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은 [별표]로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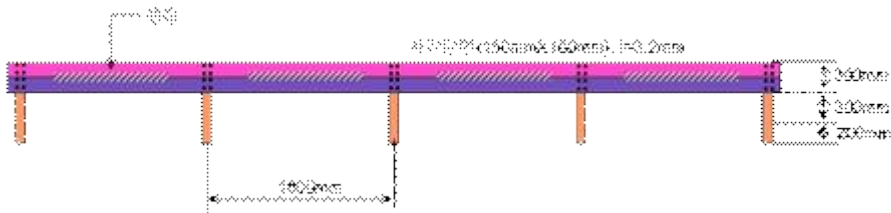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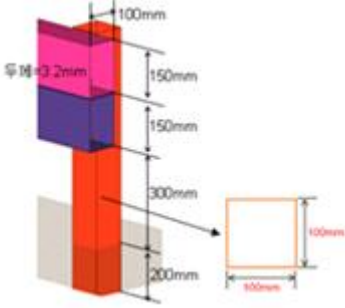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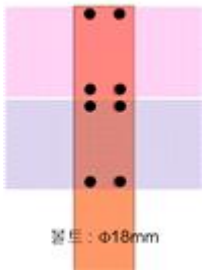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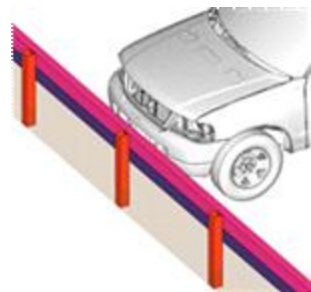
20)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45호(시행 2016. 3.25.)

22) 「주차장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른 추락방지시설로서 세부지침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말함.

한편 ‘▷▷▷신항 공영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은 바닥정착형(보 정착형)으로 설계되었으며, 세부지침 [별표]에 따른 바닥정착형 설치기준은 [표1]과 같다.

【표1】 바닥정착형 설치기준(세부지침 [별표])

<p>바닥 보에 1.8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대를 설치한다./지지대는 철재 보에 용접하여 단단히 고정시킨다.</p>  <p>주) 1. 추락방지 부재와 바닥 보에 설치한 지지대 사이는 M18이상의 볼트를 이용하여 추락방지 부재 1개당 최소 4군데 이상 체결한다. 2. 추락방지시설의 부재는 지지대와 지지대 사이에서 1m이상의 길이로 용접한다.</p>		
 <p>(바닥 보와 지지대 체결부)</p>	 <p>(추락방지 부재와 지지대 체결)</p>	

‘▷▷▷신항 공영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은 바닥정착형으로 지지대를 1.8m 이하의 간격으로 철재바닥보에 용접·고정하여야 하며, 추락방지부재간 1m 이상 용접체결하며 지지대와 추락방지 부재사이에는 M18이상의 볼트를 이용하여 추락방지 부재 1개당 최소 4군데 이상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웅진군은 볼트로 바닥과 지지대를 고정²³⁾하였으며 지지대 간격이 최대 2.5m 이상인 지점이 발견되었으며 지지대와 추락방지 부재 사이의 결합은 볼트 체결이 아니라 용접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자는 모두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추락에 대한 자동차의 안전 및 추락방지시설의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23) 지지대가 바닥과 밀착되지 않고 들뜨거나 볼트를 체결하지 않은 지지대를 확인함

2. 노외주차장의 설비 설치 미흡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제1항호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²⁴⁾하여야 한다.

또한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²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웅진군(○○과)에서 “▷▷▷신항 공영주차장”에 경보장치, 방범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공사 설계변경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에 의하면 ①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제7절 1-가 규정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신항 공영주차장”의 조립식가설울타리(EGI)의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급자로부터 제출되지 않았으며, 2층과 옥상층에 설치된 추락방지시설 지지대 자재 약 00m²⁶⁾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00

24)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0호

25)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1호

26) 200mm/개×181개=36.2m [200mm는 기준에 따라 타설되는 두께([표2] 참고) / 총 181개(2층 94개, 옥상층 87개)]

천 원을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시정] ① ‘▷▷▷ 신항 공영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의 차량 안전 및 구조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안전)진단을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보수, 보강, 재시공 등) 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경보장치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법설비 등을 설치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③ 과다 지급한 00천 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A, B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사용허가)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2019년 ◆◆면 내 ■■에서 추진하는 ◆◆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이하 “공공임대주택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설투자에 관한 업무를 ■■은 주택건설을 옹진군은 기반시설(상수도, 관정, 진입도로, 오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등)을 분담(협약)하여 시행하였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과에서는 동 업무분담에 따라 기반시설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2018년에 공공임대주택사업 부지 내 기 시공된 관정 0개소를 공공임대·실버주택에 직접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수도 공급시 요금 책정 및 부과문제, 지하수 소독 등의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양질의 수도를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19. *. *. ●●리마을상수도위원회(이하 “마을상수도위원회”라 한다)에 수도 공급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마을상수도위원회에서는 여름철 제한급수 등 기존 물탱크 용량 부족을 이유로 공공임대·실버주택에 추가로 수도 공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함에 따라 ○○과에서는 기 설치된 관정 0개소를 마을상수도 연결 및 물탱크 증설로 수도 공급을 해결하고자, 2019. **. **. ■■■사업소를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수도 연결 및 물탱크 증설은 가능하나 ●●리 마을상수도 내 정수시설 설치 예정으로 옥외 물탱크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후 ○○과에서는 2019. **. **. ●●리 마을상수도를 방문하여 현지조사 중 마을상수도위원회에서 ●●배수지 내 미사용 지하저수조 활용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 확인 후 지하저수조 내 물탱크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2019. **. **. ~ 2020. *. **.까지 시설물 설치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배수지는 공유재산(행정재산)으로서 물탱크시설 설치를 위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배수지 관리기관인 ■■■사업소에 사용허가(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과에서는 ■■■사업소로부터 마을상수도위원회가 해당 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마을상수도위원회 의견에 따라 임의로 ●●배수지 내 지하저수조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공공임대·실버주택에 수도를 공급함으로써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주의] 관내 시설공사를 계획·시행할 때는 사전에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면

내 용

1. ●● 매립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감독 소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 27조(용역감독자의 지정)에 따라 발주청의 장은 기본설계·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용역감독자는 같은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 제32조(현지확인 점검 및 조사시험)제1항에 따라 용역감독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①토질조사, 재료원 선정 및 선정시험용 시료의 채취, ②주요구조물 위치의 선정, ③노선 및 제방법선 등의 주요기준점 선정, ④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⑤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현지 확인 및 점검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동 계획서에 따라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33조(지시사항 처리 및 작업일지 기록)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의 작업일지(과업 수행)에 기록·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지침 제30조(설계변경 등)제1호에 따라 용역감독자는 설계시행과정에서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우선 과업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하고,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변경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지침 제43조(용역의 준공)제3호에 따라 용역감독자는 용역이 준공된 때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설계용역 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과에서는 ●●면 내 발생하는 매립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기 설치된 비위생 매립시설을 관리형 위생매립시설로 변경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매립효율을 향상하고자 2019. *. **. “●● 매립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사업소²⁷⁾(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예산재배정을 통하여 ●● 매립시설 설치사업(이하 “매립시설공사”라 한다)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소에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번지 일원에 관리형 위생매립시설을 설치하고자 2019. *. **.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9. *. *. 용역을 준공하였다.

그런데 사업소에서는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토질조사(기 매립된 폐기물 현황 등), 주요 구조물 위치의 선정,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 ①폐기물 매립용량은 계획대로 확보되었는지(기 매립된 폐기물 재매립 등 향후 매립되는 폐기물의 매립용량 충족 여부), ②건축물은 주변 도로현황 및 진·출입 동선, 매립고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규모 및 위치를 계획하였는지(폐기물운반 차량의 진입동선 등 고려 여부), ③관련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 폐기물처분시설(매립) 설치 승인, 건축허가 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 매립된 폐기물 처리계획 및

27) 인천광역시 옹진군 ■■사업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조직개편에 따라 2019. 1. 30. 신설되었다가 2020. 7. 20. 폐지되었음.(환경기초시설 설치 업무는 조직개편에 따라 ○○과에서 사업소로 이관되었다가 사업소가 폐지되면서 다시 ○○과로 이관됨)

매립용량계획, 건축물계획 등이 적합하게 반영되지 않은 준공설계도서가 작성·제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2019. *. *. 준공검사 결과보고 시 용역감독자 및 준공검사자는 “계약 내역 및 과업지시서대로 적정 이행”으로 보고하여 용역을 준공 처리함에 따라,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 없이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상태로 2019. **. **. 매립 시설 공사가 착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매립시설공사 착공 후 ①공사기간 중 기 매립된 폐기물의 임시적치장 계획 미수립, ②기 매립된 폐기물의 재매립량을 누락한 매립용량 계획, ③건축물 위치 선정 오류로 인한 폐기물운반차량의 이동동선 간섭(매립시설 진입 시 차량(회전)동선과 건축물 기둥 간섭), ④건축물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우수계획(배수 시설) 변경 등 중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연평 매립시설 설치사업 실정보고 및 기성검사 행정절차 이행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 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실정보고²⁸⁾ 및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 제132조(공사감독자의 의견제시 등)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지침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 시 계약서류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28)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어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소에서는 실시설계용역 준공에 따라 준공설계도서에 의거 2019. **. *. 매립시설공사를 발주하였고, 2019. **. **.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리고 사업소에서는 2019. **. **. 동절기를 이유로 공사 일시정지를 하였고 2020. *. *. 공사 재개를 하였는데, 동절기 공사 정지기간 및 공사 재개를 전·후 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실시설계 문제점에 대한 시공사의 실정보고 사전 협의, 관계자 합동회의 등을 통하여 설계서 누락·오류 및 설계서와 현장여건 상이 등의 중요 문제점을 인지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시설계 오류로 인한 ①기존 매립폐기물 처리계획(재매립 등) 누락, ②설계 오류로 인한 매립시설(건축물) 배치계획(위치) 변경, ③매립용량계획 변경(기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퇴적슬러지)의 재매립 계획 누락으로 매립용량(매립고) 증가), ④매립용량 산정 및 건축물 배치오류로 인한 토공 및 우수공 변경 등 매립시설의 주요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사업소에서는 중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실정보고 접수 후 검토·승인 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시공사의 실정보고가 지연되자 관련 규정대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실정보고 승인 없이 향후 설계변경사항을 선 반영한 공사내용으로 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공사에서는 2020. *. *. 실정보고를 제출하였고 ○○과²⁹⁾에서는 2020. *. *. 설계변경을 시행하였는데, 2020. *. **. 시공사에서 기성검사를 신청하자 사

29) 인천광역시 옹진군 조직개편에 따라 2019. 1. 30. 신설되었던 ■■사업소 2020. 7. 20. 폐지됨에 따라 같은 날 ○○과로 ●● 매립시설 설치사업 업무 이관되어 설계변경은 ○○과에서 시행함

업소에서는 실정보고 승인 및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건축물 위치 변경, 건물기초 높이 변경(H=*m→*m), 매립고 조정(*m) 등 실정보고 내용을 선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 2020. *. **. 기성검사를 하였고, 공사감독자 및 기성검사자는 “설계도서 및 계약내역 등에 의거 적정 시공”으로 기성검사 결과보고를 하고 기성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 매립시설 설치사업 설계변경 및 분리발주 검토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³⁰⁾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5.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나”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되고, 물품·용역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소에서는 매립시설공사 착공 후 설계서 오류·누락 등으로 중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2020. *. *. 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를 검토하여 2020. *. *. “실정보고사항 검토보고”를 하였음에도 결재권자의 재검토 요청으로 방침

30) 단일공사: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을 득하지 못하였고, 2020. *. **. 웅진군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소가 폐지되면서 ○○과로 매립시설공사 업무가 이관되었다.

○○과에서는 매립시설공사 설계변경 방침을 득하기 위해 수차례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였으나 계속해서 결재가 지연되다가 2020. *. *. “●● 매립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 검토 보고” 방침을 득하였다.

그런데 설계변경 검토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매립용량 증가를 위한 변경”의 경우 기존 약 00m³의 폐기물 재매립과 매립계획기간(00년) 동안 약 00m³의 신규 폐기물 매립을 위해 총 00m³의 매립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매립용량을 00m³에서 00m³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위한 매립고, 토공, 임시적치장, 건축기초 등의 중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선시공을 사유로 반영 제외로 검토 보고하였다.

그러나 “매립시설 주변 배수로 정비”의 경우 당초 설계된 매립용량 및 건축물의 배치가 변경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우수계획(배수시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건축물의 위치 변경으로 우수계획(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당초 설계대로 시행한다고 검토하여 불합리하게 반영 제외로 검토하였다.

또한 설계변경 시행 이후 ○○과에서는 우수계획(배수시설) 공종이 매립시설 설치 검사를 승인받기 위하여는 필수시설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배수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2020. **. **. ●●면으로 예산 5천만 원을 재배정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면에서는 [표6]과 같이 “●●● 매립시설 외부배수로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20. **. **. 공사를 준공하였다.

그러나, ●●면에서 시행한 “●●● 매립시설 외부배수로 설치공사”는 원래 공사인 매립시설공사의 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필수 공종으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분할계약으로 진행한 사항이고,

○○과에서는 2020. *. *. 설계변경 검토보고 시 “매립시설 주변 배수로 정비” 항목을 반영 제외로 결정하였음에도 ●●면에 예산 재배정을 통하여 별도(분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 [주의] ①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② 건설공사 관련 용역·공사 감독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감독업무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 매립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건설공사 관련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권고

제 목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설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설비의 유지관리 소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시설관리의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자를 지정하여 지역지원사업³¹⁾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옹진군 ○○과에서 2019~2021년 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 일부 미작성,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미기입 등 태양광발전설비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 검토 필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1)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함.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등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태양광발전설비가 1억 원 이하로서 주로 건물 옥상 등에 구조물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영조물은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나 풍하중에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점과 해당 설비가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태풍·강풍·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군민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공공의 영조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시정]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 작성·비치,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기입, 정기·최종하자검사 실시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태양광발전설비의 관리 하자 등으로 인하여 군민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7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유 또는 1년 이상 장기 임대로 최저보유 허가기준에 맞게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군수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옹진군 ○○과에서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임대기간이 만료된 0건에 대하여 차고지 임대기간 연장 또는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여 변경 허가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30일 사업 전부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1차 행정처분 후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2차 허가취소’를 하여야 함에도 안내문조차 발송하지 않는 등 관련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시정] 관련법에 따라 차고지 임대기간이 만료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갱신 신고 독촉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자동차 수출이행여부 미신고자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자동차등록령」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에 따라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말소등록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자동차의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마다 1만원을 가산하여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규정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독촉)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및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인천시 □□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고자동차 수출의 어려움에 따라 중고차 수출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 제외 기간을 수출말소 신고 기준 2019년 6월 12일부터 2020년 3월 11일까지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옹진군 ○○과에서는 과태료 부과 제외 기간 2020년 3월 11일 이후 자동차 수출을 위하여 말소등록 후 9개월 이내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는 관련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신고 만료일이 55일 이상경과 되어 과태료 최고 부과금액(50만원)이 발생한 00건 00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

또한 2019년부터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한 건 중에서 수납하지 않은 00건 00원에 대하여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급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자동차 수출이행 신고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시정]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 수출이행 관련 미부과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한 건 중 미수납 건에 대하여 독촉장 발급, 재산압류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이행 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산불방지 대책 및 운영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옹진군(○○과)은 12,141ha의 산림을 관리하면서 매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조심기간³²⁾ 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년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한, 법 제3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에 따르면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39조(협조)에 따르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 기상관서

32) 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

그 밖의 산림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그리고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0조(진화훈련 실시), 제13조(진화대장의 임명)에 따라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전에 진화대원³³⁾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종합적³⁴⁾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진화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진화경험과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진화대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진군 ○○과는 산불방지 종합대책과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 실과와 유관기관에 2019년 1월을 제외하고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산불조심 기간 전 종합적으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산불방지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또한 진화대장인 7개 면의 면장은 산림교육원의 산불진화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진화대장 기준에 부적합하고 진화대장 임명에 대한 내용을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시 누락하여 작성하는 등 산불방지 대책 및 운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규정과 다르게 산불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유사 상황 시 인력, 자재의 원활한 지원 등 산불피해 최소화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33) 지상·공중진화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보조진화대원

34) 산불진화요령, 진화장비 운용, 진화대원의 임무 및 안전수칙 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 [시정] ①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라 진화대장은 산림교육원의 산불진화전문 교육을 이수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 산불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요구·통보(시정완료)

제 목 산지전용허가 관련 업무처리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옹진군 ○○과는 12,141ha의 산림을 관리하면서 '19년 4월~ '22년 3월 까지 산지전용허가(협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항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따라 산림관청은 납부금액의 구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옹진군 ○○과는 산지전용허가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의제(협의)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후 인·허가 승인 한다’라고 회신하는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지전용허가 전 미리 내는 조건으로 인·허가 하고 있다.

그러나 옹진군 ○○과는 2019.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 한 00건 중 00건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일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110일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지연납부 되었음에도 납부 전 산지전용허가하여 체납발생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2. 산지복구비 사항

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에 따르면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토사 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산지복구비를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복구비는 아래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고시³⁵⁾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옹벽·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綠化)하기 위한 비용
 3. 산지전용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4.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흙쌓기)비용
- 4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산지전용등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절차 등)에 따르면 복구비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증권·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35) 2022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산림청고시 제2022-3호, 2022.1.5.) [매년 고시]

그리고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등의 기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상 8월 미만
2.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상 10월 미만
3.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상 12월 미만
4.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월 이상

그러나 용진군 ○○과는 산림청에서 고시한 경사도에 따른 복구비 산정기준이 아닌 산지전용등의 목적물 공사비(토목공사비)의 30%를 복구비로 산정하여 복구비 예치를 받고 있으며, 용진군 ◆◆면 ■리 산***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산지전용을 허가(면적: 00m², 2021.**.**~2023.**.**.)하면서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산지전용 기간에 8개월이 아닌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통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산지전용허가 민원인에게 과다한 복구비를 징수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며, 산지복구기간이 조기 만료되어 산지복구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주의] 앞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후 산지전용허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산지복구비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시정완료)]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면 ■리 산***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산지복구 보증기간을 산지전용 기간에 8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다시 예치하여 '22.4.22.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앞으로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2019년 ■■■ 호수마을 조성사업 공사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옹진군 ○○과는 행정안전부 “찾아가고 싶은 섬” 공모에 선정된 ■■■면 ●동 백령호수 일대에 「2019년 ■■■ 호수마을 조성공사」를 실시하였다.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규정에 따라 그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침 제4장 제6절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다 또는 불필요한 공사비의 집행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침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후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침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에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진군 ○○과에서는 ‘2019년 ■■■ 호수마을 조성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가 도로경계석 시공시 합판거푸집 설계서와 다르게 2면이 아닌 1면만 사용하였고 인조 화강석블럭 포장 시 설계서의 붙임 몰탈 대신 모래로 변경하여 포설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공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여 사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설계변경 없이 준공 처리되어 금0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용진군수는

[시정] 과다 지급된 공사비 00을 회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계약된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감독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공사의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옹진군 종합감사 결과

[수 범 사 례]

구 분	제 목	관련부서
수범사례 1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수조사 및 관라·운영	복지지원실
수범사례 2	바다 위 구급차 설치(운영)	경제교통과
수범사례 3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	환경녹지과
수범사례 4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실시	농업정책과
수범사례 5	옹진군 도서지역만의 창조적인 코로나19 대응	보 건 소 (보건행정과)
수범사례 6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 및 국가암검진사업 실시	보 건 소 (건강증진과)
수범사례 7	걷기 플랫폼(워크온) 운영 실시	보 건 소 (건강증진과)
수범사례 8	백령면 농작물 공정육묘장 운영	농업기술센터
수범사례 9	농기계화 촉진 사업 추진	농업기술센터

수범사례 1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수조사 및 관리·운영

□ 추진배경

- 병사, 사고사, 자연사 등으로 인한 고독사 발생
- 특히 사회적 위험 가능성이 높은 1인가구 안부확인 등의 돌봄 강화 필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조사기간 : 2021. 2. 1. ~ 4. 9.
 - 1차 : 2021. 2. 1. ~ 2. 10.
 - 2차 : 2021. 3. 12. ~ 4. 9.
- 조사대상 : 관내 全 1인가구
- 제외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거주자 등
(※ 발전소,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제외)
- 조사내용
 - 사회적지지 기반 여부 및 생계수단, 건강 및 거동 여부
 - 복지서비스 수혜 현황 및 미수혜 사유
- 조사인력 : 맞춤형복지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이장, 부녀회장, 우체국 지원

○ 조사결과

(단위 : 가구)

구 분	1인가구 (전체)	조사제외 (32%)	조사대상 (68%)	조사결과(100%)		
				계 (100%)	완료 (48%)	미완료 (52%)
계	7,061	2,298	4,763	4,763	2,308	2,455
65세 이상	2,050	41	2,009	2,009	1,172	837
65세 미만	5,011	2,257	2,754	2,754	1,136	1,618

※ 미완료 사유 : 미거주, 장기입원, 동거가구, 본인거부 등으로 미완료

□ 추진사항

- '19. 3. 8. : 우리마을 독거세대 안부확인 확대 추진 계획 수립·시행
- '19. 11. 25. :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계획 추진
 - 면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SNS(카카오톡 단톡방) 개설
 - 면별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1인가구, 거동불편 가구 등 취약계층 간 1:1 또는 1:다수 매칭
- '20. 1. 13. : 2020년 영흥면 빌라 거주자 전수조사 계획 수립·시행
- '21. 2. 1. : **용진군 쏘 1인가구 전수조사 수립·추진**
- '21. 4. 1. : 취약계층 위기가정 관리시스템 돌봄플러그 설치완료(5가구)
- '22. 4. 19. : 취약계층 위기가정 관리시스템 돌봄플러그 설치완료(30가구)
- '22. 5. 9. : 2022년 고독사 위험자 등 위기가구 발굴계획(안) 수립

□ 수범내용

- 관내 쏘 1인가구 전수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군 선제적 발굴 및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연계
-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지역사회복지 실천 강화 및 찾아가는 복지 상담에 따른 복지서비스 홍보 강화 및 복지 체감도 향상
- 민·관 협력을 통한 **“용진 안심 커뮤니티 조성”**

□ 관련사진



▲ 1인가구 전수 조사

수범사례 2 바다 위 구급차 설치(운영)

□ 개 요

- 백령·대청 지역 내 한 해 평균 40건 이상 응급환자 전원*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쾌속선 이용 환자이송 시 별도의 와석(침상)없이 선내 바닥에 누워 이송됨에 따라 이송의 안정성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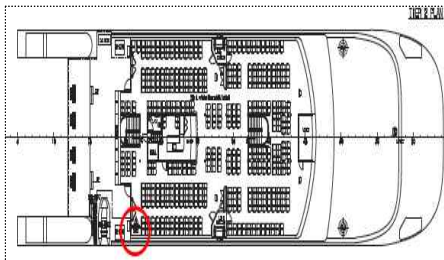
※ 관내 의료기관 응급처치 후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

□ 문 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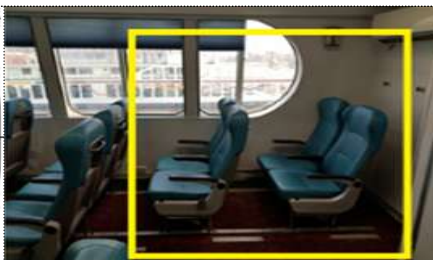
- 백령·대청 운항 여객선 내 유희공간 부재로 응급환자 이송장비(침상, 의료장비 등) 설치가 불가하여 선박 구조변경이 필요하나,
- 선박 내 와석(침상) 및 응급카트에 대한 관련 규정의 부재로 한국선급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의 부정적 입장

□ 추진사항

- 해양수산부 협조를 통해 「선박안전법」 및 고속선 기준 등 관련 규정의 적극해석으로 선박 내 응급환자 이송장비 설치 추진
 - 선내 기존 좌석 제거를 통해 공간 확보 후 응급환자 이송장비 설치



▲ 하모니플라워호 좌석 배치도



▲ 응급환자 지정석 탈거 전



▲ 응급환자 지정석 설치
(커튼 설치 전)

- 각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응급해양이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웅진군, 국립중앙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한국해운조합, (주)에이치해운

□ 기대효과

- 응급환자 발생 시 여객선 내에서 이송장비 및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육지의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 가능

□ 언론보도사항

<p>전국매일신문</p> <p>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012면 행정</p> <h3>백령도 여객선에 '바다 위 구급차' 뜬다</h3> <p>웅진군, 허오니콜리워치에 응급환자 의료설비 설치... 내년 1월부터 활용</p> <p>인천시 웅진군이 응급환자 의료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섬 지역을 위 해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인접한 오 거는 고수역인 "허오니콜리워치"에 이달 중 응급환자 의료설비를 설치한 다고 16일 밝혔다.</p> <p>군에 따르면 현재 백령도와 대월도 지역에서 한 해 평균 40건이 넘는 응급환자 이송 사례가 발생하지만, 섬의 좁은 면적과 도서 특성에 따라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섬 지역을 위 해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인접한 오 거는 고수역인 "허오니콜리워치"에 이달 중 응급환자 의료설비를 설치한 다고 16일 밝혔다.</p> <p>이해 군은 여객선에 환자용 침대 및 기타 의료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1년 간 해경수인부와 중점응급의료원, 산사 등과 협박하였으려, 그 결과 이</p> <p>달 중 의료설비를 설치 완료해 내년 1 월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됐다.</p> <p>군 관계자는 "이해 4읍이 관할되 면 웅진군 내 환자자 발생했을 때 여 객선 내에서 의료진의 서비스를 받으 며 안정적으로 병문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람이 생 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 령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p> <p>인천/ 함창수기자 <nchu@joonma.co.kr></p>	<p>인천일보</p> <p>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007면 종합</p> <h3>여객선에 의료설비 설치-백령도 중증환자 안전이송</h3> <p>정부, 허오니콜리워치에 추진</p> <p>이달중 마무리-내년1월운행</p> <p>웅진수인부는 웅진군 및 중점응급 의료센터 등과 협의해 백령도 지역의 응급환자 및 기타 의료 서비스를 받으 는 고수역인 "허오니콜리워치"에 이달 중 응급환자 의료설비를 설치한 다고 16일 밝혔다.</p> <p>이해 군은 여객선에 환자용 침대 및 기타 의료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1년 간 해경수인부와 중점응급의료원, 산사 등과 협박하였으려, 그 결과 이 달 중 의료설비를 설치 완료해 내년 1 월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됐다.</p> <p>군 관계자는 "이해 4읍이 관할되 면 웅진군 내 환자자 발생했을 때 여 객선 내에서 의료진의 서비스를 받으 며 안정적으로 병문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람이 생 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 령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p> <p>인천/ 함창수기자 <nchu@joonma.co.kr></p>
<p>경기도민일보</p> <p>2021년 02월 24일 수요일 013면 지역</p> <h3>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선정</h3> <h4>웅진군, 바다 위 구급차 이동 환경개선</h4> <p>인천 웅진군은 법제처가 주관한 '2020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바다 위 구급차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p> <p>웅진군에서는 섬 지역 응급환자 이동 환경개선을 위해 바다 위 구 급차(여객선 내 외박 이송체계)를 구축하고자 선박안전법 및 고속선</p> <p>기준 관련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여러 관련 기관 및 단체 와 수차례 협조 요청을 위한 회의를 거쳐 지난해 5월 고속선 기준을 개정했다.</p> <p>또 지난해 7월에는 선박안전법 과 관련하여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련</p> <p>업무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p> <p>이는 법제처에서 제시한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으로 정 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대 상으로 제출된 총 213개 중 선정된 6개의 우수사례 중 하나다.</p> <p>장정민 웅진군수는 "적극행정 법제 분야 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입법 방식을 활용한 법령 입안, 불 명확하거나 차별적인 법령 정비, 현행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 웅진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이한복기자</p>	<p>웅진수인부는 웅진군 및 중점응급 의료센터 등과 협의해 백령도 지역의 응급환자 및 기타 의료 서비스를 받으 는 고수역인 "허오니콜리워치"에 이달 중 응급환자 의료설비를 설치한 다고 16일 밝혔다.</p> <p>이해 군은 여객선에 환자용 침대 및 기타 의료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1년 간 해경수인부와 중점응급의료원, 산사 등과 협박하였으려, 그 결과 이 달 중 의료설비를 설치 완료해 내년 1 월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됐다.</p> <p>군 관계자는 "이해 4읍이 관할되 면 웅진군 내 환자자 발생했을 때 여 객선 내에서 의료진의 서비스를 받으 며 안정적으로 병문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람이 생 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 령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p> <p>인천/ 함창수기자 <nchu@joonma.co.kr></p>

수범사례 3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

□ 개 요

- 생활폐기물 감량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량 증대 및 품질향상 필요성 증대
 -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추진에 따라 효율적인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사업 확대 필요

□ 수범내용

- 제5회 지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개 요 : 『전국 지자체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 실적기간 : '19.01.01. ~ '19.12.31.
 - 참가대상 :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광역 17개소, 기초 228개소)
 - 주 최 : 환경부 및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평가대상 : 종이팩·유리병·페트병 수거실적, EPR재활용체계 구축, 사업 홍보활동, 우수사례 등 종합평가
 - 추진사항
 - '20.03.26. : 전국 지자체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개최 알림
 - '20.04.20. : 서면평가 자료 제출
 - '20.06.05. : 서면평가 결과 통보(1차 평가 결과 인천시 우수 기초 지자체 선정 - 순위 1위)
-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을 사업 확대를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
 - 재활용 동네마당(재활용 거점배출시설) 설치
 - 자원재활용 주민교육 및 홍보
 - 재활용 분리수거 캠페인 실시
 - 재활용품 별도 수거사업(재활용품 수집 유가 보상제) 운영
 - 재활용품 집중수거 자체 경진대회 실시

수범사례 4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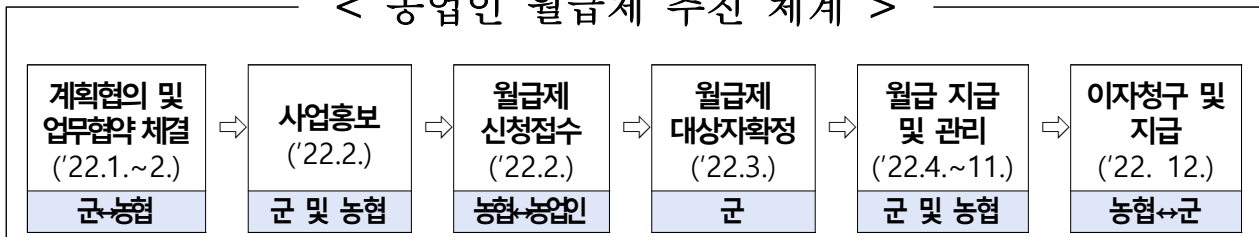
□ 추진배경

-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는 반면 영농 준비금, 자녀 학비, 생활비 등 비용은 계속 필요함에 따라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심화(가계부채 원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매년 4월 ~ 11월 (총 10회, 월급 8회+상여금 2회)
 - 4월 ~ 11월 매월 급여 지급 / 모내기 5월, 추석 9월 상여금 지급
- 사업대상 : 농협과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사업량 및 사업비 : 농가별 20백만원(군비)
- 지급액 및 한도 : 매월 360 ~ 2,400천원/연간 3,600 ~ 24,000천원
- 추진체계
 - 농 협 : 농업인과 계약(전년 출하실적 60%)을 맺고 급여 지급
 - 농업인 : 가을철 출하 후 그동안 받은 월급을 농협에 상환
 - 용진군 : 대상자 선정 및 월급 지급에 따른 대출이자(4%) 보전

< 농업인 월급제 추진 체계 >



□ 추진실적

- ‘21. 1월 : ‘21년 농업인 월급제 기본계획 수립
- ‘21. 3월 : 군 ↔ 농협 등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21. 4월 : 신청서 접수 및 사업대상자 44농가 선정
- ‘21. 4 ~ 9월말 : 월급여 지급
 - 지급액 : 44농가 673백만원 ※ 월평균 1인당 2,552천원 수령

□ 관련사진 및 언론보도사항



경기일보

2022년 03월 19일 수요일 042면 1면

용진군 '농업인 월급' 최대 240만원 지원

올해 예산 8억4천만원 투입
년 평균 1천900만원 선지급

인천 용진군이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2022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나선다.

18일 군에 따르면 올해 8억4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농업인 44명에게 연 평균 1천900만원의 월급을 선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도는 농업인이 수확기에 얻을 미래 소득을 미리 월급처럼 받는 제도다.

군은 인천농협농협과 농산물 약정 금액 일부를 확보해 오는 4~11월까지 매월 36만~240만원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또 산 지급으로

생간 원금에 대한 이자 1천250만원 이자를 4%로 보전 지원한다. 월급을 받은 농업인은 배 출하 후 받은 금액을 다시 농협에 상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번기, 심 밭물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감안해 상·하반기에 상·하급도 지급한다. 앞서 지역 농업인들은 소득 대부분이 가을철에 몰려 있어 경산시 영농준비금, 생활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협 등과 협력해 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환 기자

아시아일보

2022년 03월 19일 수요일
04면 1면

용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추진 경제적 어려움 겪는 농가 경영 여건 개선

용진군은 2022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농업인 월급제도는 농업인이 수확기에 얻을 미래 소득을 미리 월급처럼 받는 제도다.

군은 인천농협농협과 농산물 약정 금액 일부를 확보해 오는 4~11월까지 매월 36만~240만원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또 산 지급으로

생간 원금에 대한 이자 1천250만원 이자를 4%로 보전 지원한다. 월급을 받은 농업인은 배 출하 후 받은 금액을 다시 농협에 상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번기, 심 밭물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감안해 상·하반기에 상·하급도 지급한다. 앞서 지역 농업인들은 소득 대부분이 가을철에 몰려 있어 경산시 영농준비금, 생활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호일보

2021년 03월 05일 금요일 017면 1면



용진 농업인 직장인처럼 월급 받는다

군, 백령농협 등과 '월급제' 협약... 배 출하 전 月 최대 240만 원까지 선지급

인천시 용진군은 용진·백령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도는 수확기에 얻게 될 미래소득을 미리 월급처럼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용진·백령농협은 농산물 약정액에 금액 일부를 농업인에게 선 지급하고 농업인은 배 출하 후 받은 금액을 농협에 상환하면 된다. 다만 선 지급으로 발생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군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월급 규모는 약정물량에 따라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적게는 36만 원에서 많게는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농번기, 추수경철 등 목

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상·하반기 상·하급도 2회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소득 대부분이 가을철 농작물 수확기에 몰려있는 농업인들에게는 생상시 소요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정민 군수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과 농협이 상호 협력을 통해 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백령농협 기자 kngb@khebo.co.kr

경기신문

2021년 03월 05일 금요일 015면 1면



용진군과 인천용진농협, 백령농협이 농업인 월급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백령농협 제공

용진군-인천용진농협-백령농협, 농업인 월급제 지원 '맞손'

수확기 미래소득 앞당겨 매월 지급
선 지급 원금 이자 4%에서 보전으로

인천시 용진군은 용진·백령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도는 수확기에 얻게 될 미래 소득을 미리 월급처럼 지급받는 제도다.

군은 인천농협농협과 농산물 약정 금액 일부를 확보해 오는 4~11월까지 매월 36만~240만원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또 산 지급으로

생간 원금에 대한 이자 1천250만원 이자를 4%로 보전 지원한다. 월급을 받은 농업인은 배 출하 후 받은 금액을 다시 농협에 상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번기, 심 밭물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감안해 상·하반기에 상·하급도 지급한다. 앞서 지역 농업인들은 소득 대부분이 가을철에 몰려 있어 경산시 영농준비금, 생활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협 등과 협력해 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적게는 36만 원에서 많게는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농번기, 추수경철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상·하반기에 상·하급도 2회 지급하기로 했다.

장정민 군수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과 백령농협이 상호 협력을 통해 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령농협 기자

수범사례 5

웅진군 도서지역만의 창조적인 코로나19 대응

□ 추진배경

- 웅진군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높은 노인 인구 비율 및 민간 병·의원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함
- 이에 웅진군만의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한 창조적이고 선제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및 찾아가는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

□ 수범내용

-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접촉자 발생 시 해당면에 이동선별진료소 설치** 하여 확대 검사 실시
-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국가 목표 70% 이상 달성 및 인천시 코로나19 예방접종률 1위 달성 → **접종완료율 86.2% 달성**

(기준 : 2021. 11. 30., 단위 : 명, %)

구 분	인 구	1차	2차	접 종 률	
				1차	2차
웅진군	20,326	18,058	17,528	88.8	86.2

-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웅진군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기 간 : (1차) 21. 4. 29. ~ 5. 6., (2차) 21. 5. 20. ~ 5. 27.
 - 대 상 : 75세 이상 어르신(7개면)

구 분	계	북 도	연 평	백 령	대 청	덕 적	자 월	영 흥
1차접종	1,050	149	12	5	14	258	124	488
2차접종	1,074	147	11	5	14	254	120	523

- **인천시 최초로 보건소에 임시격리시설을 마련**, 해외입국자 입도 전 검사
- 서해 5도 **군인 휴가 후 복귀 시(입도 전) 선제적 선별검사**
- **취약계층(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등)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 분청 및 각 섬별 코로나19 비상 상황실 운영
 - 보건지소, 보건지소(8개소), 보건진료소(11개소)

수범사례 6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 및 국가암검진사업 실시

□ 목 적

- 도서지역 주민들의 질병 조기발견 및 사전 예방·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 현 황

- 일반현황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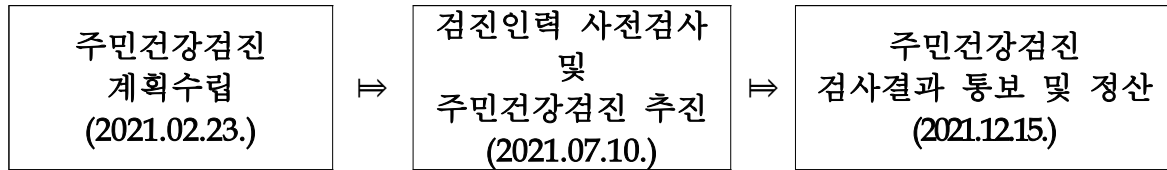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용진군	전국대비	용진군	전국대비	용진군	전국대비
전체	인구	20,495	0.0395%	20,342	0.0394%	-153	-0.0001
	비율	100%		100%		100	
아동·청소년 (19세 이하)	인구	2,064	0.0234%	1,977	0.0233%	-87	-0.0001
	비율	10.1%		9.7%		-0.4%	
청년기 (20세~44세)	인구	5,754	0.0318%	5,473	0.0315%	-281	-0.0003
	비율	28.1%		26.9%		-1.2%	
장년기 (45세~64세)	인구	7,207	0.0428%	7,127	0.0420%	-305	-0.0008
	비율	35.1%		35.0%		-0.1%	
노년기 (65세 이상)	인구	5,470	0.0547%	5,765	0.0651%	295	0.0104
	비율	26.7%		28.3%		1.6%	

- 연령별로는 유소년, 청소년 비율이 낮고 노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형태로 50~60대 비율이 높아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는 가속될 전망이다.
- 고령 인구비율은 2017년 평균 14.2%에 도달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용진군은 2014년에 이미 노인인구 비율 20%를 돌파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2021년 12월 기준 28.3%에 이름.

- 건강특성

- 보건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 : 육지와와의 거리 및 열악한 교통여건으로 건강 응급사항 등 문제발생 시 신속한 개입과 적절한 관리가 힘들며, 서해최북단 백령면에 유일하게 병원이 있으며 그 외 도서에는 민간 의료병원이 전혀 없어 질병치료에 어려움이 있음.

□ 수범내용



○ 사업명 : 주민건강검진, 안저·안압검사 및 국가암검진사업

○ 검진대상 : 만20세 이상 주민

(2020.12.31.기준/단위:명)

계	북도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	영흥
17,896	1,992	1,802	4,521	1,330	1,737	869	5,645

○ 위탁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 사업예산 : 232,000천원

* 주민건강검진 200,000천원(군¹⁰⁰), 안저·안압검사 32,000천원(시⁵⁰, 군⁵⁰)

○ 검진방법 : 현지 출장 이동검진(7개면)

○ 검진항목 : 골밀도 검사, 혈액검사 등 37개 항목 및 안저·안압검사

○ 추진경과(민간의료기관 위탁추진)

- 2008년 ~ 2011년 : 주민건강검진 보건소 자체 실시
- 2011년 8월 : 주민건강검진 위탁운영 검토
- 2012년 ~ 현재 :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 운영
- 2020년 ~ 현재 :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운영(市 보조)

※ 위탁기관 :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 협약기간

- 주민건강검진 : 2019.1.1. ~ 2021.12.31. (3년)
- 안저·안압검사 : 2020.1.1. ~ 2021.12.31. (2년)

○ (실 적)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 연도별 건강검진실적 및 추이



- 2021년 건강검진 수검실적

구 분	계	북도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	영흥
검진자 수	2,997(명)	360	326	695	372	405	393	446

- 2021년 안저·안압 실적

구 분	계	북도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	영흥
안저(좌)	2,640	310	278	640	325	357	367	363
안저(우)	2,587	311	280	616	311	346	366	357
안압	2,632	323	289	623	314	352	372	359

※ 고령으로 인한 측정불가 및 수검거부 등의 사유로 건강검진과 안저·안압 수검자 수 차이 발생

□ 추진성과

○ 지역사회 전파 감염 ZERO 노력

- 보건소 출장검진의 신뢰감 조성
- 사전 「용진군 검진사업 사전 방역소독 계획」 수립
- 수탁기관의 검진 전·중·후 방역소독 수칙 및 역할 부여
- 검진 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사^{COVID-19} 및 현지 방역<보건행정과 협조>
 - 결과(음성)확인 및 출장 승인 ⇨ 면사무소 통보 및 주민 홍보

○ 2021년 제 14회 암 예방의날 기념 유공자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수여

- 암예방의 날 장관표창자 확정 알림 「건강증진과-3978(2021.3.11.)호」

□ 관련사진 및 언론보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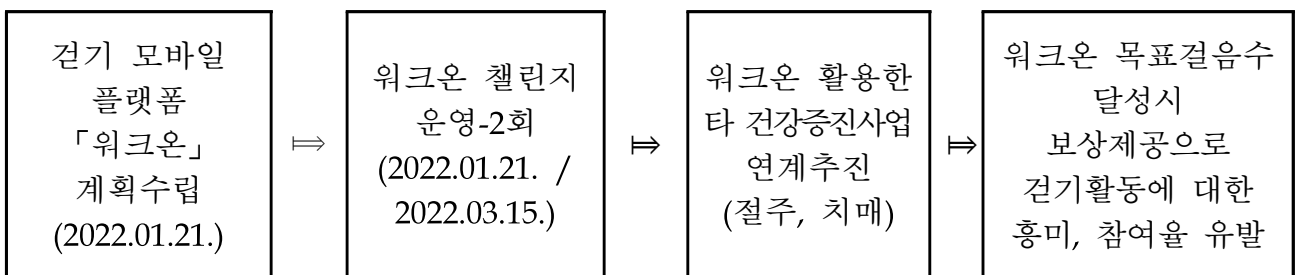


수범사례 7 걷기 플랫폼(워크온) 운영 실시

□ 추진배경

- 비대면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걷기 사업추진으로, 걷기실천 분위기 확산을 통한 만성질환,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 감소 및 걷기실천율 향상 기여

□ 추진내용



- 사업명 : **웅진군 걷기 모바일 플랫폼 「워크온」**
- 대상 : 웅진군 주민(스마트폰 소지자)
- 내용 : 모바일 걷기앱(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일상화 및 건강생활 실천
- 사업예산 : 7,200천원(국^{50%}, 시^{25%}, 군^{25%})
- 운영업체 : (주)스왈라비
- 추진방향



□ 추진성과

- 걷기 앱 커뮤니티 운영 : 3개(군 직원, 지역주민, 청소년방)
- 누적인원 : 2,635명
- 2021년 신규가입자 수 : 635명
 - 지역별 목표 가입자 수 대비 달성을

(단위: 명,% / 21.12.31.기준)

구 분	대청면	덕적면	백령면	북도면	연평면	영흥면	자월면	군청	합계
목표 가입자 수	40	53	139	61	55	171	37	-	556
신규 가입자 수	53	34	127	61	26	141	41	152	635
달 성 율	133%	64%	91%	100%	47%	82%	111%	-	114%

- 2021년 활성사용자 수 : 1,688명
 - 21년 누적가입자수 대비 활성사용자 비율 : 39.7%
 - * 2019년 41.8%, 2020년 36.8%
- 2021년 걷기실천율 : 연평균 53.51%
 - 2020년 워크온 가입자 걷기 실천율 49.41%로, 전년대비 4.1% 상승
- 모바일 앱을 통한 지역사회 내 걷기 실천 분위기 확산
- 건강데이터 지표를 통한 통계자료 활용
 - 사용자 특성별(성별, 연령별 등) 걷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근거 기반 사업 추진
- 리워드(보상)제공
 - 챌린지(걷기목표) 달성을 통한 리워드(보상)제공으로 걷기활동에 대한 흥미 및 참여율 유발
- 지역사회 홍보 채널 역할
 - 걷기 좋은 길, 지역 관광 정보제공으로 걷기 활동 독려 및 지역주민, 타 지역 주민에게 지역문화 홍보
 - 건강증진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사회 홍보채널 역할
- 워크온을 활용한 타 건강증진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시너지효과
 - 절주사업, 치매사업 등 워크온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업연계추진
- 2021년 건강증진사업 기관포상(신체활동)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수여
 -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분야 장관표창자 확정 알림

* 「건강증진과-19018(2021.12.31.)호」

□ 언론보도사항

수도권일보
2022년 05월 13일 금요일
005면 서울

용진군 보건소 결주 헬린지 운영

용진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읍주폐를 예방하고자 워크온을 활용한 결주 헬린지를 운영한다.

용진군은 포스트 오미크론으로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 완화에 맞추어 과학 습로 인한 읍주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으로 올바른 읍주문화의 자리매김을 위해 '결주 헬린지' 행사를 준비한다.

이번 헬린지 참여자 중 읍주 자가 진단 설문 후 상담에 동의한 고위험 읍주자는 용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연계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헬린지는 전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일상에서 감기를 실천하며 읍주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는 것으로 7일 동안 1일 7천보씩 총 49천보 걷기를 시행하고 읍주 진단 설문까지 완료하면 목표를 달성한 이들에게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제공한다.

인턴/윤종록 기자 yun@sudokwon.com

서울매일
2022년 05월 13일 금요일 011면 인천

용진군보건소 '읍주는 선택, 절주는 필수'

워크온을 활용한 절주 헬린지 운영 통해 올바른 읍주문화 유도

용진군보건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읍주폐를 예방하고자 워크온을 활용한 '결주 헬린지'를 운영한다.

용진군은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 완화에 맞춰 과학 습로 인한 읍주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으로 올바른 읍주문화의 자리매김을 위해 '결주 헬린지'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헬린지 참여자 중 읍주 자가진단 설문 후 상담에 동의한 고위험 읍주자는 용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연계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헬린지는 전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일상에서 감기를 실천하며 읍주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는 것으로 7일 동안 1일 7천보씩 총 49천보 걷기를 시행하고 읍주 진단 설문까지 완료하면 목표

표를 달성한 이들에게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제공한다.

헬린지 참여방법은 '워크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용진군면 걷기방', '용진군형 걷기방', '용진군 청소년 걷기방'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해 헬린지 행사에서 절주 헬린지 '참여하기'를 누른 후 감기를 실천하면 된다. 워크온 예약은 5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용진군보건소(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결주 헬린지 참여하고 읍주 실태도 받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워크온 앱 설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용진군보건소 건강증진과(02-800-3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순석 기자

전국매일신문
2022/05/13 금요일
008면 행정

읍주 폐해 예방 '결주 헬린지' 진행

인천 용진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읍주 폐해를 예방하고자 워크온을 활용한 결주 헬린지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으로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 완화에 맞춰 과학 습로 인한 읍주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으로 올바른 읍주문화의 자리매김을 위해 '결주 헬린지'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헬린지 참여자 중 읍주 자가 진단 설문 후 상담에 동의한 고위험 읍주자는 용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연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헬린지는 전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일상에서 감기를 실천하며 읍주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는 것으로 7일 동안 1일 7000보씩 총 49000보 걷기를 시행하고 읍주 진단 설문까지 완료하면 목표를 달성한 이들에게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제공한다.

헬린지 참여방법은 '워크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용진군면 걷기방', '용진군형 걷기방', '용진군 청소년 걷기방'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해 헬린지 행사에서 절주 헬린지 '참여하기'를 누른 후 감기를 실천하면 된다. 워크온 예약은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인턴/ 행정수기자 ncha@daum.net

수범사례 8 백령면 농작물 공정육묘장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량묘의 생산·공급으로 영농기반 안정화와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종묘생산의 어려움 해소
- 사업기간 : '21. 1. ~ '22. 5.
-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2359-3
- 시설규모 : 7,553㎡(육묘장 1,092㎡, 경화장 6,083㎡, 창고 378㎡)
- 사 업 비 : 195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벼 중모 확대 생산 및 공급
 - 김장배추 모종 확대 생산 및 공급

□ 추진사항

- '20.05.25. : 공정육묘장 신축공사 준공
- '21.01.06. : 공정육묘장 운영 매뉴얼 수립
- '21.10.01. : 공정육묘장 경화장 신축공사 준공
- '21.05. ~ '22. 05. : 농작물 공정육묘장 벼 및 배추 모종 공급

(단위 : 호, ha)

공 급 기 간	농가수	작 물	유 형	생산량	공급량	식재면적
'21. 5. 15. ~ 27.	17	벼	중모, 어린모	4,000	3,966	13.2
'21. 8. 25. ~ 31.	82	배추	모종	204	204	0.3
'22. 5. 15. ~ 27.	58	벼	중모	28,500	28,500	95

□ 수범내용

-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종묘생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량묘 생산 공급으로 **영농기반 안정화**
- 공정육묘장에서 우량한 벼 중모 생산 및 공급하여 **원활한 백령면 벼농사에 기여**
 - 주야간 온도차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우량 종묘 생산

- **우량한 김장배추 모종을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도모
- 농작물 **공정육묘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상시 배치**하여 **공정 육묘장의 효율적 관리**
 - 육묘장 운영 중 시설 내 온·습도 등 환경 불량, 병해충 발생 등의 문제점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

□ 관련사진 및 언론보도사항



▲ 육묘장 전경



▲ 경화장 전경



▲ 벼 증묘 육묘



▲ 공정육묘장 벼 모판 공급



수범사례 9 농기계화 촉진 사업 추진

□ 목 적

- 농촌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농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영농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옹진 농업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22. 4.
- 사 업 비 : 4,038백만원
- 사업내용
 - 임대사업소 운영 : 8개소
 - 농기계수리비지원, 농기계(드론, 굴착기)교육
 - 농기자재 지원 : 친환경소형농기계, 농기계간이보관창고

□ 수범내용

- 연도별 추진내역

[단위: 건, 명, 개소, 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농기계임대 : 1,758건 농기계 교육 : 213명 농기계 수리비지원 : 398건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 10대 농기계간이보관창고 지원 : 7개소	농기계임대 : 2,613건 임대사업소 신축 : 1개소 농기계 수리비지원 : 416건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 42대 농기계간이보관창고 지원 : 4개소 『옹진군 농기계 수리센터 및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농기계임대 : 2,666건 농기계 교육 : 60명 농기계 수리비지원 : 381건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 25대 농기계간이보관창고 지원 : 3개소 『옹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2022년도	비고(총계)	
농기계임대 : 1,223건 농기계 교육 : 44명 농기계 수리비 지원 : 26건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 50대 농기계간이보관창고 지원 : 8개소 농기계용주유기 지원 : 20개소	농기계임대 : 8,260건 농기계 교육 : 317명 농기계 수리비 지원 : 1,494건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 127대 농기계간이보관창고 지원 : 25개소 조례전부개정 : 1건 조례일부개정 : 1건	

□ 관련사진 및 언론보도사항



▲ 농기계임대업소 신축(자월)



▲ 농기계임대업소 신축(자월)



▲ 농기계 배달서비스



▲ 농기계 수리비 확대 지원



▲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 농업용 굴착기 면허증 취득 교육

평기도만일보

2021년 05월 03일 월요일 012면 지역

농기계 수리 부품비 지원 확대

웅진군, 1농가당 연간 100만원 범위 내



연간 10만원 범위 내로 확대한다.

한편 읍장군은 농업인들이 농
가에 내구영향을 줄이고 농가에
편익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농기계 수리비 등 부담비를 1톤
가당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농업인이 읍면군 지청 수리청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면 대형 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는 대당 3만원 이내, 소형 농기계인 경운기, 관개기 등은 대당 1만원 이내로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 수리비 신청 및 지급방법은 농진청 차량 수리실에서 농기계 수리 후 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수리비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신청인 계좌로 수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군은 그동안 농기계 수리 사업
가져 지음하는 수리비 중 부품대
금과 35만원 내에서 지음해 농기
계를 수리하는 소요비용 대비 수
리비 차감 단가가 매우 낮았다.

이로 인해 떨어뜨리는 농업인
의 실질적인 경제부담 해소 및 권
익증진을 위해 연간 자금총액의
50%정도로 인상을 자급 중
이다.

은 관계에서 '농기계 수리 및
지급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
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농
기계 수리의 정기 지급으로 농업
인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한다'고 말했다.

이인복 외 3명

도민일보

2021년 09월 27일 월요일
0000년 인천

미래농업 선도 전문농업인양성 나선다

윤진균, 농업용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



인천광역시 동진군(군수 장영민)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 도농조동 자격증 취득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신군에 따르면 항공안전법이 개정(소용자력 취득 의무와 및 자격 자동화)돼 1종 자격을 2명, 2종 자격을 11명 늘려 총 13명이 참여인 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트론 조종 자격을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 교육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지선 받은 전문교육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인천광역시개발원
무안학술교육센터에서 오는 9월
27일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 진
행한다.

농업을 드루는 양공병세와 부인
예를 들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고 농작물의 안전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 농가
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미래농업 선도농가들이 앞장서며 지역가치있는 농산물 생산·유통을 견인한다"며 "앞으로도 드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기계 기술습득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일본

2021년 08월 03일 화요일 012면 사람들



용진군, 여성농업인에
농작업 편의의자 공급

인천 용진군은 농부층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여성농업인들에게 농작업 환경 개선용 편익의자 400개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편의의자는 면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공급되며 임대료는 2000원으로 1년 장기임대가 가능하다.

군은 편의의자 공급으로 농업인들의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1064 713.jp@nrich.sony.co.jp